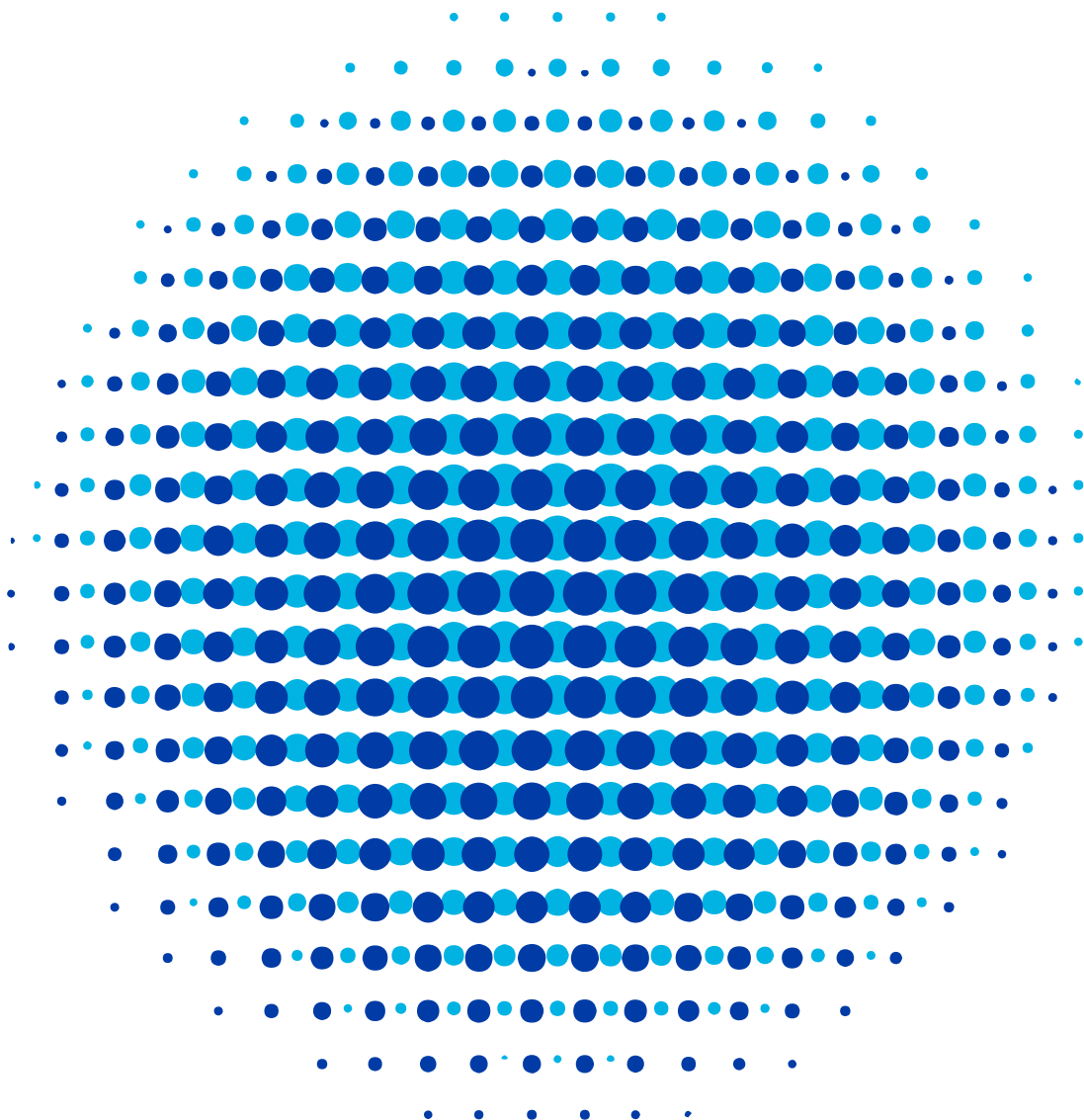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2025. 10.

[연구보고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2025. 10.

제 출 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연구과제명: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수행기관: 사단법인 시민

수 행 자: [책임연구원] 조 철 민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영 선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서 미 화 (공익활동연구소 소장)

[연구보조원] 김 유 리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김 승 순 (사단법인 시민 실장)

연구기간: 2025년 4월 24일~10월 24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I. 연구개요와 내용

- | | |
|---------|---|
| 1. 연구개요 | 3 |
| 2. 연구내용 | 4 |

II. 이행성과 분석

- | | |
|----------------------|----|
| 1. 개요 | 11 |
| 2. 분석 결과(1): 1기 기본계획 | 14 |
| 3. 분석 결과(2): 2기 기본계획 | 21 |
| 4. 시사점 | 30 |

III. 정책환경진단

- | | |
|--------------------|----|
| 1. 지원정책의 범주 | 37 |
| 2. 정책환경의 영향 | 41 |
| 3.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 44 |
| 4. 공익활동의 경제적 가치 조명 | 47 |
| 5. 정책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참조 | 49 |

IV.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결과분석

- | | |
|---|----|
| 1. 워크숍 개요 | 59 |
| 2. 주제별 주요 논의 결과 (1): 기본계획의 의의와 이행과제 및 사업 평가 | 61 |
| 3. 주제별 주요 논의 결과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환경 진단 | 73 |
| 4. 주제별 주요 논의 결과 (3): 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설계 | 80 |

V. 제3기 기본계획(안)

1. 기본계획 비전체계	89
2. [전략과제 1-1]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94
3. [전략과제 1-2]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조성	97
4. [전략과제 1-3]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101
5. [전략과제 2-1] 민·관, 관·관, 민·민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	104
6. [전략과제 2-2]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109
7. [전략과제 3-1]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112
8. [전략과제 3-2]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116

표목차

<표 I-1> 연구과정	8
<표 II-1> 제1기, 제2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11
<표 II-2> 제1기 기본계획 주요내용	12
<표 II-3> 제2기 기본계획 주요내용	12
<표 II-4> 정량분석 이행정도 점수구간	14
<표 II-5> 1기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15
<표 II-6> 1기 기본계획에 따른 정량분석	18
<표 II-7> 2기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2
<표 II-8> 2기 기본계획에 따른 정량분석	25
<표 II-9> 담당부서, 도센터, 시·군센터 사업 역할 비중	32
<표 III-1> 시민공익활동지원 정책의 대상과 목적	41
<표 III-2> 제21대 대선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정책제안	42
<표 III-3> 시민사회 정책 시·도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내용(2022~2023)	50
<표 III-4> 영국 시민사회 전략의 5대 주체별 과제	53
<표 III-5> 에스토니아 지역개발센터 시민사회 부문의 주요 기능	56
<표 IV-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여자	60
<표 IV-2> 1기 기본계획에서 성취도가 높거나 만족도가 높았던 이행과제 및 사업	66
<표 IV-3> 2기 기본계획에서 성취도가 높거나 만족도가 높았던 이행과제 및 사업	66
<표 IV-4> 1기 기본계획에서 성취도가 미흡하거나 만족도가 낮았던 이행과제 및 사업	68
<표 IV-5> 2기 기본계획에서 성취도가 미흡하거나 만족도가 낮았던 이행 과제 및 사업	68
<표 IV-6> 참여자들이 제시한 비전 체계도 핵심 키워드 목록 정렬 작업 결과	81
<표 IV-7> 제3기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목표(안)	83
<표 IV-8> 참여자들이 제시한 제3기 전략과제 및 사업 목록	84
<표 V-1> 자원봉사 영역의 자원봉사자 인정과 예우	113
<표 V-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차별 계획	119

그림목차

[그림 III-1] 시민사회의 범위와 구성 부문	39
[그림 IV-1] 비전 체계도	80
[그림 IV-2] 참여자들이 제시한 비전 체계도 핵심 키워드 목록	81
[그림 IV-3] 참여자들이 제시한 제3기 전략과제 및 사업 목록	83
[그림 V-1] 센터 전략계획(2025~2030)과 경기도 기본계획(2026~2028)의 연관	92
[그림 V-2] 제3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93

I. 연구개요와 내용

I. 연구개요와 내용

1. 연구개요

1) 기본사항

- 연구명: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 진단 및 발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2025년 4월~10월
- 발주기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수행기관: (사)시민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조철민((사)시민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박영선(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서미화(공익활동연구소 소장)
 - 연구보조원: 김유리((사)시민 처장), 김승순((사)시민 실장)

2) 연구목적과 범위

가. 목적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시민사회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발전적인 기본계획 방향과 목표 제시
- 경기도 실정을 반영한 연차별 정책사업 제안

나. 범위

- 공간적 범위: 경기도 내 일원
- 시간적 범위: 2026~2028년(3년)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 1·2기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진단과 평가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진단과 평가
 -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향후 비전, 미션, 핵심목표, 전략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제시
 - 경기도 특성 및 도민과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한 연차별 사업계획 제안

2. 연구내용

1) 분석1: 이행성과평가

가. 분석대상

- 경기도청 담당부서(現 소통협치관실)와 산하 중간지원조직으로 설치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 사업으로 구성됨.
 - 담당부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 운영과 다양한 지원사업
- 경기도 광역 차원의 담당부서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사업과 함께, 시·군 기초 차원의 정책사업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공익활동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역, 특히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한 6개 지역(광명·구리·군포·성남·안성·평택) 지원사업 포함

나. 분석방법

- 제1기와 제2기 기본계획 전략목표-과제 체계에 기반한 정책사업 결과 정렬(기본계획 전략목표와 과제 별 지원사업을 연도별·시행주체별 분류)
- 수행된 지원사업 건수의 분포에 기반한 정량평가
- 그간 축적된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평가의견 수렴을 통한 정성평가

다. 분석결과의 담론화

-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해석작업을 거쳐 이행성과평가의 결론을 담론화하기 위한 명제형태의 논리 초안 도출
-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공동워크숍을 통해 논리초안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행성과평가에 관한 논리명제 확정
- 연구진이 확정된 논리명제별 이행성과평가 내용 서술

2) 분석2: 정책환경진단

가. 분석대상

- 민선7기 이후 경기도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현재 관련 조례에 근거해 담당부서(소통협치관실)와 정책·심의 자문기구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체계가 구축·운영 중에 있음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구 단위 시민사회·공익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권역으로 상대

적으로 활성화된 양상을 나타냄.

- 반면 조례가 제정된 14개 시·군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편차가 존재함.

○ 최근 복잡한 사회적 문제와 욕구 해결에 있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어 유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해외의 경우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관계 법령, 단체등록, 재정지원, 조세 혜택, 지원조직, 정책문서 등의 제도들이 활용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경기도 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유관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음.

나. 분석방법

○ 환경분석: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정책환경 진단

○ 사례조사: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지닌 해외 정책사례조사

다. 정책환경진단 결과의 담론화

○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해석작업을 거쳐 이행성과평가의 결론을 담론화하기 위한 명제 형태의 논리 초안 도출

○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공동워크숍을 통해 논리 초안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행성과평가에 관한 논리 명제 확정

○ 연구진이 확정된 논리 명제별 이행성과평가 내용 서술

3) 수립: 참여형 계획수립

가. 공동워크숍

○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표하는 주체들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집중적 논의가 가능한 소집단 구성

- 이해관계자: 센터 관계자, 담당부서 공무원, 시민사회활성화위원, 센터운영위원, 지원사업 참여자, 현장활동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

○ 이해관계자들의 부담감을 고려해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워크숍 논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다시 연구진이 후속작업을 통해 완성해 가는 적정수준의 참여형 계획수립 과정 반복 진행

- 연구기간의 한계를 고려해 공동워크숍은 2~3시간 가량의 모임 형태로 4회차 진행

나. 자문회의

○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겸해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반영

- 자문위원: 경기 지역 시민사회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3인 가량

○ 자문회의 내용

- 착수보고회: 연구방향과 계획에 관한 검토 및 제언
- 중간보고회: 분석결과와 제3기 기본계획 비전전략체계(안) 검토 및 제언
- 최종보고회: 제3기 기본계획(안) 내용 전반에 관한 검토 및 향후 추진을 위한 제언

4) 연구과정

가. 준비단계

- 연구용역 계약체결: 4월 24일(목)
- 착수보고회: 4월 30일(수) 오전 10시
 - 연구 실행계획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병행
- 연구진 회의1: 4월 30일(수) 오후 1시

나. 분석단계1

- 이행성과평가: 조사분석
 - 이행성과 관련 부서, 도센터, 시·군센터 자료 취합
 - 1·2기 기본계획 지원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시사점 담론화
- 정책환경분석: 조사분석
 - 정책환경 관련 선행논의, 관련자료 조사
 - 1·2기 기본계획 지원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시사점 담론화
- 공동워크숍1: 6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이행성과 정량평가 결과 공유
 - 이행성과 평가에 관한 의견교환, 이행성과평가 담론 검토
- 연구진 회의2: 6월 17일(화) 오후 2시
 - 1차 공동워크숍 결과정리 및 연구내용 반영을 위한 논의
 - 향후 과업과 2차 공동워크숍 준비 논의

다. 분석단계2

- 이행성과평가: 담론화
 - 지원사업에 관한 기존 이해관계자 평가의견 수렴
 - 1차 공동워크숍 결과 반영
 - 이행성과 정성평가 및 시사점 담론화 논리 구성

- 공동워크숍2: 7월 30일(수) 오후 3시
 - 정책환경분석 결과 공유
 - 정책환경분석에 관한 의견교환, 담론화 논리 검토
- 연구진 회의3: 7월 30일(수) 저녁 7시
 - 1차 공동워크숍 결과정리 및 연구내용 반영을 위한 논의
 - 향후 과업과 3차 공동워크숍 준비 논의
- 정책환경분석: 담론화
 - 2차 공동워크숍 결과 반영
 - 정책환경분석에 관한 담론화 논리 구성

라. 수립단계

- 공동워크숍3: 8월 30일(수) 오후 3시
 - 제3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설정 논의
 -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연구진 회의4: 8월 30일(수) 저녁 7시
 - 2차 공동워크숍 결과 반영
 - 정책환경분석에 관한 담론화 논리 구성
- 중간보고회: 9월 9일(화) 오후 2시
 - 연구과정 및 제3기 기본계획 기본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병행
- 공동워크숍4: 9월 23일(화) 오후 3시
 - 제3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확정(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전략과제 도출

마. 종료단계

- 최종보고회: 10월 15일(수) 오후 2시
 - 제3기 기본계획(안) 최종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병행
- 연구과정 마무리
 - 연구보고서 작성, 계약종료 절차 진행

<표 1-1> 연구과정

단계/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준비	협약·계약																												
	착수보고회/자문회의																												
	연구진 회의1																												
분석 1	이행성과평가: 조사분석																												
	정책환경진단: 조사분석																												
	공동워크숍1																												
	연구진 회의2																												
분석 2	이행성과평가: 담론화																												
	공동워크숍2																												
	연구진 회의3																												
	정책환경분석: 담론화																												
수립	공동워크숍3																												
	연구진 회의4																												
	중간보고회/자문회의																												
	공동워크숍4																												
종료	최종보고회																												
	연구과정 마무리																												

II. 이행성과 분석

II. 이행성과 분석

1. 개요

1) 비전체계

○ 제1기 기본계획(2020~2022)과 제2기 기본계획(2023~2025)의 비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1기 기본계획은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과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 14개 과제를 설정했음.
- 제2기 기본계획은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8대 전략, 18개 과제를 제시했음.

<표 II-1> 제1기, 제2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1기 기본계획(2020~2022)	2기 기본계획(2023~2025)
비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목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지원	1.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2.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 사회 생태계 조성 3.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전략	1) 공익활동네트워크 강화 2)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치 3) 공익생태계 역량강화 4) 공익활동 기반강화	1-1)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1-2)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 방안 마련 1-3)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2-1)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2-2)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2-3)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 3-1)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3-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과제	1)-① 공익활동발전연구 1)-② 공익활동공동 대응력 향상 1)-③ 공익활동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1)-④ 공익활동홍보채널 활성화 2)-①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 2)-② 공익생태계 조성 정책토론장 2)-③ 지역순회 간담회 2)-④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3)-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3)-② 공익활동가성장지원 3)-③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3)-④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공익역량강화 4)-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4)-②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	1-1)-①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고 1-1)-② 공익활동단체 운영 및 사업역량강화 지원 1-2)-① 정책연구를 통한 공익활동 인정사업 개발·추진 1-3)-①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1-3)-②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2-1)-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2-1)-② 사회문제해결형 경기 도민 공론장 활성화 2-1)-③ 경기도민 공익활동 통합교육체계 구축 2-2)-①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2-2)-② 시민참여영역 협력체계 구축 2-2)-③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연계사업 추진 2-3)-①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 2-3)-②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3)-③ (가칭)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 개최 3-1)-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역할 강화 3-2)-① 시민사회영역 전담부서기능 강화 3-2)-② 경기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3-2)-③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효율성 제고

2) 기본계획 주요내용

○ 제1기 기본계획 주요내용

- 제1기 기본계획의 이행과제별 주요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2> 제1기 기본계획 주요내용

목표	전략	주요 이행과제	주요내용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성장 지원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공익활동발전연구	연대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현황조사 및 공익활동 발전 방향 연구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지역사회 공익활동 유관기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역량강화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공익활동 담당하는 도·시·군 및 실무자 간 합동워크숍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시·군별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홍보거점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	시·군별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이슈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협력지원
		공익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공익활동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장 마련
		지역순회 간담회	경기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익활동 활성화 연계협력 추진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개별기관의 자원과 역량의 융합을 통한 공익활동 지원 확장 및 영역 간 파트너십 기반으로 공동기획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공익생태계 역량강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공공복지증진 사업지원을 통해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회적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공익활동분야의 지식·연구·경험 공유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비영리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간, 컨설팅 등 초기성장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화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공익활동 기반 강화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공익활동 촉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운영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

○ 2기 기본계획 주요내용

- 제2기 기본계획의 이행과제별 주요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3> 제2기 기본계획 주요내용

목표	전략	주요 이행과제	주요내용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고	교육운영 및 훈련비 지원, 재충전·회복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단체 운영 및 사업역량강화 지원	공모사업, 상담소, 회계프로그램 지원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통한 공익활동 인정사업 개발·추진	공익활동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정책 마련, 공익활동의 사회적가치 평가 모델 개발 및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지원정책 개선방안 등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비영리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교육, 박람회, 비영리일자리 협업 TF 구성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	기부 전문가 컨설팅, 공모사업, 교육, 기업 ESG-단체 연계사업, (가칭)사회혁신가 수당 지급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 사회 생태계 조성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도·시·군 공익활동챌린지 캠페인 공동추진
		사회문제해결형 경기 도민 공론장 활성화	정책축제 토론회제 참여, 개별 토론회 개최, 전문가 워크숍, 속의토론, 정책제안(권고)
		경기도민 공익활동 통합교육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 간, 공익활동지원센터 간 교육-(통합교육체계 구축) 가칭)경기도 시민대학 / 민관협치교육 협업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주제별·지역별·계층별 네트워크
		시민참여영역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 회의체 구성, 유관기관 협업사업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G-SDGs) 연계 사업 추진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 5개영역 사업 추진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	공유공간 조사·매칭, 경기공유서비스 이용연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경기시민사회 온라인자료관 기능 강화
		(가칭)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 개최	(가칭)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 개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역할 강화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워크숍(교육) 운영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시민사회영역 전담부서 기능 강화	팀 또는 부서 신설, 업무담당자 가점, 선진사례 연수기회 등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도·시·군 담당자 간담회 개최, 도·시·군 통합협의체 구성·운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도·시·군 센터 기능강화, 시·군센터 설치 지원, 도·시·군센터 실무 회의체 정례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도 센터 전국네트워크 선도적 역할수행

3) 분석 방법

○ 정량분석

- 분석대상: 1기 기본계획(2020-2022) 및 2기 기본계획(2023-2025) 중 2025년을 제외한 5개년 간 부서, 도센터, 시·군센터(6개1) 사업보고서 및 회의록, 홈페이지에 제시된 단위사업
- 분석방법: 부서, 도센터, 시·군센터 이행과제별 단위사업 평균횟수²⁾에 따른 이행정도를 알파벳으로 점수화
- 분석의 효과: 집행 예산, 참여자 수 등 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의 면밀한 양적 평가는 배제하고 주요 이행과제별 단위 사업의 횟수(빈도)에 기반한 이행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알파벳으로 정

1) 2020년 0개소, 2021년 2개소, 2022년 5개소, 2023년 6개소, 2024년 5개소 운영

2) 부서, 도센터, 시·군센터단위사업 합/해당연차(1기: 3년, 2기: 2년)

량화한 것이므로 사업의 대략적 분포를 통한 이행수준을 알 수 있음.

<표 II-4> 정량분석 이행정도 점수구간

S	A	B	C	N
6회 이상	4회 이상-6회 미만	2회 이상-4회 미만	2회 미만	0

○ 정성분석

- 분석대상: 경기 공익활동 관련 기존 연구 보고서³⁾ 이해관계자 심층집단면접(FGI) 내용 및 분석 내용, 부서·도센터·시·군센터 사업보고서 및 회의록, 홈페이지에 제시된 단위사업 내용
- 분석방법: 제1·2기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평가의견과 사업내용 검토, 정책과제별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정책과제-전략목표-비전 연계성에 관한 검토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3기 기본계획 이행시 개선방안 도출

2. 분석 결과(1): 1기 기본계획

1) 사업수행

- 1기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및 14개 주요과제에 따른 3개년(2020~2022) 간의 사업 수행 내용은 <표 II-5>와 같음.
-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이후 2021년 구리시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이어 2022년에는 성남시와 안성시, 평택시가 설립 운영됨.
- 이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과제별 사업이 골고루 분포하게 됨.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각 과제별로 대체로 매년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개소 첫해에도 몇 가지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등) 과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 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함.
- 2021년부터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과제별로 안착되었고, 시·군센터 설립도 이어지면서 사업의 개수가 두텁게 보완되었음.
- 담당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이름을 변경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는 역할 및 위원회 워크숍 등을 실시함.

3)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2020),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202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202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활용방안 조사(2023),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2023),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2024)

<표 II -5> 1기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목표	전략	주요 과제	구분	2020	2021	2022
지속가능 한 공익활동 성장지원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공익활동발 전연구	부서			
			센터	공익활동 발전 연구	공익활동 정책연구·조사	시민사회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군		[군포]공익활동 기초조사 연구	[군포]군포시 공익활동 단체 조사 [성남]공익활동증진기본계획 수립 [평택]단체조사,활동가인터뷰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부서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협 력
			센터			
			시·군		[군포]공익활동 협력네트워 크 구축	[평택]의제별 권역별 네트워 크 구축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부서			
			센터	민관합동 정책토론장	경기도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경기도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시·군		[군포]민관정책 토론회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부서			
			센터	공익웹진 에디터 모집·운영, 공익활동 정보 아카이브, 공 익웹진(뉴스레터) 발행, 홈페 이지 제작/센터 CI 공모전	공익웹진 에디터 모집·운영, 공익활동 정보 아카이브, 공 익웹진(뉴스레터) 발행, 홈페 이지 및 SNS 운영	공익웹진 에디터 모집·운영, 공익웹진(뉴스레터) 발행, 홈 페이지 및 SNS 운영, 시민 사회 온라인자료관 구축, 공 익활동 콘텐츠 개발
			시·군			[군포]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및 공간 운영(공익기자단), 군포시 공익활동 FAIR “군 포시민을 위한 00페스티벌” [성남]공익활동플랫폼운영및 구축,공익활동아카이빙 [안성]시민조례경진대회 [평택]온라인플랫폼정보아카 이빙,매뉴얼및홍보물제작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	부서			
			센터	시·군 공익활동 촉진 장려	시·군 공익활동 촉진 장려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
			시·군			
		공익생태계 조성 정책토론장	부서			
			센터	경기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 동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	공론장 운영	
			시·군			[성남]시민사회공론장 [안성]공론장'다르지않,안성 에같이삽니다'
		지역순회 간담회	부서			
			센터	시·군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및 지역순회 간담회	시·군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및 지역순회 간담회	시·군 센터 네트워크 협력
			시·군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부서			
		센터		공익활동가 교류활성화 공익활동가한마당	
공익 생태계 역량강화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활동사 업지원	시·군		[군포]의제별 공익활동 네트 워크	[군포]공익활동 네트워킹데 이 [안성]NPO연찬회 [평택]공익활동가대회
		부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 원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 원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 원사업
		센터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 동 긴급 지원	코로나19재난대응공익활동지원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 량강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시·군			[구리]공익활동 지원사업 [군포]의제실험실 [안성]지역공동체NPO활성화 공모사업 [평택]단체설립성장지원,의제 지원,캠페인지원
		부서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공익 활동가 교육비 지원(개인), 지역활동가 교육지원, 공익 활동가 재충전 지원(충전소),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공익 활동가 교육비 지원(개인)
		센터			[구리]공익활동가 양성교육 [군포]공익활동시민교육,공익 활동활성역량강화교육 [성남]공익활동의제시민모임 [안성]활동가심지원사업,에너 지프로슈머양성,행복마을관 리소활동가교육,퍼실리테이 터양성교육,활동가역량강화 워크샵 [평택]공익활동역량강화교육, 교육지원,심지원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시·군		[군포]공익활동 역량강화(회 계, IT)	
		부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미 래세대 공익활동 지원 (청소 년·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비영리민간 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 화	시·군			[구리]청년 공익활동 스타트 업 지원
		부서		비영리단체 맞춤형 회계교육,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및 운 영, 우리단체 1:1 회계상담 소, 비영리 세무특강,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장단점 조사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지원, 공익활동 자문단 (상담소) 운영
		센터	비영리단체 회계역량강화 교육		
		시·군		[군포]조직역량강화 컨설팅, 홍보(아카이빙) 지원	[군포]비영리 회계 가이드북 제작, 공익활동 홍보 지원 [성남]찾아가는설명회, 공익 활동상담소, 공익활동워크숍, 단체운영역량강화

	공익활동 기반강화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부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1차회의	참고:(공익활동촉진위원회->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1차회의, 2차회의, 워크숍
			센터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운영	부서			
			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공간대관과 공유공간 지원	공간대관과 공유공간 지원	공간대관과 공유공간 지원
			시·군		[구리]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 공간대관 [군포]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	[구리]공간대관 [군포]공익활동정보플랫폼및 공간운영(시민공간운영위원회) [성남]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 협업공간운영및인프라조성 [안성]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 공유공간활성화사업 [평택]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 공익활동공간지원

2) 정량분석

- 1기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주요 이행과제별 부서와 경기도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평균 사업 횟수에 따라 이행정도를 구분함.
- 1기 기본계획에 따른 정량분석의 최종 이행정도는 B (2회 이상~4회 미만)로 나타났고, 센터 설립 초기인만큼 세 번째 전략인 ‘공익생태계 역량강화’의 이행정도가 A (4회 이상~6회 미만)로 높게 나타남.
- 각 세부 이행과제들을 살펴보면 사업의 횟수가 월등히 많았던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와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은 도센터 뿐 아니라 시·군센터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여 이행정도가 S (6회 이상)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화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지원 과제는 공모사업 등 사업비 지원에서부터 단체설립, 시·군센터 설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 전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사업진행으로 A로 나타남.
- 상술한 것처럼 몇 가지 주요 이행과제들은 활발한 사업진행이 눈에 띄는 가운데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등 8개 과제에서는 C(2회 미만)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행정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도센터가 설립 초기인 점, 시·군센터의 설립이 이제 막 시작된 점을 감안한다면 과제 이행의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수행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음.
- 특히,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과제명이 단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성분석으로 보완적인 분석이 필요함.

<표 II-6> 1기 기본계획에 따른 정량분석

목표	전략	주요 이행과제	2020	2021	2022	계	평균	이행정도		
지속 가능 한 공익 활동 성장 지원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공익활동발전연구	1	2	5	8	2.7	B	B	B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0	1	2	3	1.0	C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1	2	1	4	1.3	C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4	4	12	20	6.7	S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	1	1	1	3	1.0	C	C	
		공익생태계 조성 정책토론장	1	1	2	4	1.3	C		
		지역순회 간담회	1	1	1	3	1.0	C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0	2	3	5	1.7	C		
	공익생태 계 역량강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2	2	11	15	4.0	A	A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0	6	14	20	6.7	S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1	2	2	5	1.7	C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화	1	7	8	16	5.3	A		
	공익활동 기반강화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1	0	3	4	1.3	C	B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운영	2	4	9	15	5.0	A		

3) 정성분석

가. 전략1: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 공익활동발전연구

- 센터 설립 초기부터 매년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시·군센터(군포, 성남, 평택) 역시 시·군단위의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지식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함. 특히, 경기지역 비영리단체 전수조사는 최초의 시도로서 정책적 의의가 큼.

“경기지역 비영리단체 전수조사를 처음 한 거라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뽑아내고,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법인 시민, 2024: 65)

- 다만, 본 과제가 상위 전략인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보다는 세 번째 전략인 ‘공익생태계 역량강화’와 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전략 체계 내 과제 배치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 공동 대응력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양적확장은 제한적이었으며, ‘공동 대응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사업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 민관합동 정책토론장을 매년 개최하여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과제를 이행함. 이는 시민사회 정책과 민관협치 정책이 연계되는 경기도만의 정책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 정량분석에서 확인되듯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3차년도에는 온라인자료관 구축 등 새로운 시도를 추진함. 군포센터의 경우 공익기자단 운영 및 군포시 공익활동 FAIR 개최 등 선도적인 시도들이 포착됨.
- 다만, 홍보 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달률과 체감도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홍보가 많이 됐다, 잘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체감된 바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관심도가 높은 측면에서 볼 때에 겨우 보이는 부분이지, 관심이 없는 영역에서 보면 그렇게 홍보가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질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나. 전략2: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

○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

- 정례 사업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으나, 시·군 공익활동단체 공모사업지원, 광역·시·군센터 실무자 워크숍 및 공동 토론회, 중간지원조직 설립 준비 지역 시민단체 네트워크 지원 등 시·군별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 공익생태계 조성 정책토론장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토론회가 센터 설립 초기인 1~2차년도에 도센터 주관으로 수행되었으며, 3차년도에는 시·군센터로 확대되어 운영됨.

○ 지역순회 간담회

- 지역별·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직접 만나며 센터 설립 초기 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고 지역별 공익활동 지원 욕구를 파악함.
- 본 연구의 워크숍 참여자들은 지역순회 간담회를 성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평가함.

“지역 순회 간담회 시도했던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 한편, 초기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경기도 공익활동센터가 지역과 소통하려고 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시·군 센터가 만들어지고 도가, 공익활동센터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들과 네트워킹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 개인, 시·군의 담당자와 조직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71)

○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 도센터의 ‘공익활동가 교류활성화 공익활동가한마당’을 비롯하여 시·군센터 단위에서 네트워크 데이, 연찬회, 활동가대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강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으로 평가됨.

- 다만, 센터의 네트워크 촉진 노력에 비해 지역사회의 실질적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접근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 중요한데, 나름 네트워크 역할을 열심히 하고, 많이 연결했다고 보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실제 체감이 안 되거나 잘 모르기도 해요. 사업의 효율성과 체감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단법인 시민, 2024: 70)

- 또한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과제가 상위 전략인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현장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민관협치 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

“경기도와 시·군의 민관협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해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44)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부서별 칸막이가 있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결국 협치인데,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업으로 된 것이 문제라고 봐요.”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65)

다. 전략3: 공익생태계 역량강화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 담당 부서는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센터는 특별히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함. 시·군센터 역시 공모사업 및 단체설립 지원 등을 수행하여 부서-도센터-시·군센터 세 주체가 고르게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 공익활동가 연구 및 교육 지원과 재충전을 위한 ‘충전소’ 운영 등을 통해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함. 특히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은 비영리일자리 창출과 공익활동 후속세대 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향적인 시도로서, 현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냄.

“청년활동 인턴십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딱 1년하고 재정 때문에 끊겼어요. 단체가 어려울 때 실무자를 인턴이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77)

- 또한, 시·군센터의 경우 공익활동가 양성과정으로 지역 활동가 양성을 위한 다수의 교육을 주최하여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 기반 확충에 기여함.

○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 기존 단체 및 활동가 지원을 넘어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생태계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생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정량분석에서는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도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사업의 영향력과 수혜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임의단체로 활동하던 공익활동단체들이 조직을 정비하여 법인화하거나 사업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법인 시민, 2024: 64)

“작은 활동가들의 모임들을 연결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센터에서 하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화

- 도 센터는 교육, 자문 등을 통해 공익활동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였고, 시·군센터는 단체 설립 자문, 홍보·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을 통해 단체들이 본연의 공익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특히 회계 지원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음.

“회계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단체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 공모사업 등을 진행할 때 회계 처리가 정말 어렵거든요” (사단법인 시민, 2024: 64)

라. 전략4: 공익활동 기반강화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2020년 발족 후 2021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에는 정기회의 외에도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시도하고자 노력했음. 다만, 광역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논의결과의 정책반영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좀 실질화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역을 굉장히 많이 참여시켜야 하는데, 현장이랑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운영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 등 5개 시·군센터가 개소하였으며 공간대관 및 공유공간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의 물리적 기반을 조성함.

3. 분석 결과(2): 2기 기본계획

1) 사업수행

- 2기 기본계획의 8대 전략 및 18개 주요과제에 따라 2개년(2023~2024) 간의 사업 수행 내용은 <표 II-7>과 같음.
- 2023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이어 2024년에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 준비를 하는 가운데 2023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직영 전환되었고,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폐쇄되어

시·군센터의 규모 변동이 있었음.

- 1기 기본계획에 비해 과제의 개수가 늘어나고(14개→18개), 과제의 내용도 고도화 되어간 것에 비해 도센터의 규모나 시·군센터의 신규 설립은 정체되어 공백이 있는 과제들이 나타남.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정책연구를 통한 공익활동 인정사업 개발·추진’,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경기도민 공익활동 통합교육체계 구축’, ‘시민사회영역 전담부서 기능 강화’ 등 몇 가지 과제에서 사업의 공백이 확인됨.
- 시·군센터가 2023년에는 6개, 2024년에는 5개로 1기에 비해 늘어나고 운영 연차가 길어지며 도센터의 과제 공백을 상호보완하는 역할을 함.
- 그러나 여전히 과제별로 사업의 편중이 나타나고 부서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7> 2기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목표	전략	주요 과제	구분	2023	2024
공익활동 주요체위 한 실 성 원	시민사회 조직 및 공익활동 가 역량 강화사업 확대	다 양 한 지원으로 공익활동 가 지속 성 제고	부서		
			센터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충전소), 공익활동가 학교 (새싹/전문가과정),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단체),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개인)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충전소), 공익활동가 학교 (새싹/전문가과정),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단체)
			시 · 군	[광명]공익활동가역량강화 [구리]공익활동가양성교육 [군포]공익활동역량강화교육, 공익활동단체교육지원 [성남]공익활동가공익교실, 활동가소통역량강화교육 [안성]공익활동심지원사업, 공익활동가충전소, 안성공익활동가학교, 공익활동가교육비지원, 퍼실리테이터양성교육 [평택]심지원, 공익활동가역량강화교육	[광명]공익활동가역량강화 [군포]공익활동역량강화교육, 공익활동단체교육지원 [안성]퍼실리테이터양성교육 [평택]재충전지원사업, 활동가재충전프로그램, 공익활동가역량강화교육
		공익활동 단체 운 영 사업역량 강화 지원	부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지원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상담소 운영
			시 · 군	[광명]공익활동상담소 [구리]공익활동지원사업 [군포]비영리IT가이드북제작, 공익활동활성화홍보지원, 조직역량강화지원, 공익활동 공익상담소, 시니어 공익활동지원, 의제실험실 [성남]공익활동상담소, 찾아가는설명회 [안성]공익활동지원사업 [평택]공익활동활성화지원, 공익활동단체성장설립지원	[광명]공익활동상담소, 공익활동활성화사업비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CI제작지원 [군포]공익활동활성화공모사업 [평택]공익활동활성화지원, 공익활동단체성장설립지원
	공익활동 에 대한 사 회 적 존 중 과	정책연구 를 통한 공익활동 인정사업	부서		
			센터		
			시 ·	[광명] 정책포럼(공익활동의 가치와 사	[광명]공익활동조사연구(공익활동의 가

	인정 방안 마련	개발·추진	군	회적 인정)	치와 사회적 인정 인식조사 및 컨퍼런스)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경제적 기반조성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시민사회경제적 기반 조성	부서 센터 시·군 부서 센터 시·군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 기반 조성방안 연구 	
연 과 력 반 민 회 태 조성 결 협 기 시 사 생 계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다 양 한 매 체 를 활 용 한 공 회 대 화	부서 센터	공익웹진(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공익웹진(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시·군	[광명]홍보기자단, 공익활동홍보지원, 시민참여프로그램(사진공모전) [군포]공익활동정보플랫폼공익기자단 [안성]공익활동챌린지 [평택]시민아이디어공모, 공익활동기자단, 뉴스레터, 홍보물, 온라인플랫폼활용, 공익활동캠페인, 단체캠페인지원	[광명]홍보기자단, 공익활동홍보지원, 시민참여프로그램(솔로건공모전), 1주년 기념행사 [안성]웹자보, 카드뉴스, 홍보영상 [평택]공익활동기자단, 뉴스레터, 홍보물, 온라인플랫폼활용, 언론보도
			부서 센터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의제발굴단 모집, 포럼)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의제발굴단 모집, 포럼)
		사회문제 해결형 경기도 공론장 활성화	시·군	[안성]모두의 안녕을 위한 시민 공론장	[광명]의제의 시간 [안성]공동체한마당시민공론장운영 [안양]공익활동활성화토론회
		경기도민 공익활동 통합교육 체계 구축	부서 센터		
			시·군	[군포]공익활동시민교육	[군포]공익활동시민교육
			부서 센터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시·군	[광명]네트워크간담회 [군포]공익활동네트워크 [평택]공익활동가대회	[광명]네트워크간담회 [평택]공익활동가대회
	시민참여 영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시민참여 영역 협력 체계 구축	부서 센터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협력,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협력,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시·군	[광명]공익활동조사연구(기초조사) [평택]중간지원조직협력기반조성	[광명]공익활동조사연구(자원 및 욕구조사), 중간지원조직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지역단체협력사업7종 [군포]공익활동네트워크 [안성]시민퍼실리테이터지원, 네트워크회의 [평택]공익활동네트워크모임강화지원, 시민활동지원조직협력구축, 네트워크
			경기도	부서	

시 민 사회 활 동 화 책 효 과 적 진 계 측		지속가능발 전목 표 (G-SDGs)연계 사 업 추진	센터	시민사회협력연구: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시 · 군		
	시민사회 생 태 계 기반조성	공익활동 거점 공 간 확충	부서		
			센터	공간대관과 공유공간 지원	공간대관과 공유공간 지원
			시 · 군	[광명]공간대관 [구리]공간대관 [군포]공공시설공유공간온라인플랫폼구축 [성남]공유공간대관 [평택]공익활동공간지원	[광명]공간대관 [구리]공간대관 [안성]공동체거점공간조성및운영,가치공 도운영위원회 [평택]공간대관
		시민사회 및 공익 활동 정 보 공 유 플 랫 폼 구축·운 영	부서		
			센터	공익웹진 에디터 모집·운영,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 콘텐츠 개발, 시민사 회 온라인자료관 톨 운영	공익웹진 에디터 모집·운영,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 콘텐츠 개발, 시민사 회 온라인자료관 톨 운영
			시 · 군	[광명]공익활동 아카이빙 [군포]공익활동정보플랫폼	[광명]공익활동 아카이빙
		(가칭)경 기도 공 익 활 동 박 람 회 개최	부서		
			센터	공익활동 페스타	공익활동 페스타
			시 · 군	[평택]공익활동 공유회	
	시 민 사회 활 동 화 책 효 과 적 진 계 측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 도 개선	부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1차회의, 2차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1차회의, 2차회의
			센터		
			시 · 군		
		공익활동 증 진 을 위 한 담 조 신 설 센터 상 강화	부서		
			센터		
			시 · 군		
			부서		
			센터	경기도-시·군 워크숍,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시·군 협력사업	경기도-시·군 워크숍,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시·군 협력사업
			시 · 군	[광명]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참조:10월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직영 전환,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폐쇄	[안양]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준비
		경기도공 익활동지 원 센 터 기능강화 및 운영 효 율 성 제고	부서		
			센터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공 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수립연구, 경기공익활동포럼
			시 · 군	[안성]공익활동활성화 연구	

2) 정량분석

- 2기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중 본 연구가 수행 중인 2025년을 제외한 2년 동안의 주요 이행과제별 부서와 경기도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평균 사업 횟수에 따라 이행정도를 구분함.
- 2기 기본계획에 따른 정량분석의 최종 이행정도는 A (4회 이상~6회 미만)로 나타났고, 3개 목표 중 2개 목표(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 사회 생태계 조성)의 이행정도가 A, 나머지 1개 목표(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는 C (2회 미만)로 나타남.
- 각 세부 이행과제들을 살펴보면 사업의 횟수가 월등히 많았던 5개 과제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고, 공익활동단체 운영 및 사업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시민참여 영역 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 가 이행정도가 S (6회 이상)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고, 공익활동단체 운영 및 사업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등 3개 과제는 각각의 평균 사업 횟수가 13회 이상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주요 이행과제 중 8개 과제에서 C (2회 미만) 또는 N (0회)로 나타나 7개 과제가 A (4회 이상~6회 미만) 또는 S (6회 이상)인 것에 비해 과제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이는 이행과제가 하나의 단위사업이어서 사업을 수행하고도 정량분석으로는 낮은 등급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 개최)가 있는 반면,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시민사회영역 전담부서 기능 강화 등의 과제의 경우는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정성분석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사업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두 과제의 경우는 타 사업의 과정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II-8> 2기 기본계획에 따른 정량분석

목표	전략	주요 이행과제	2023	2024	계	평균	이행정도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고	17	10	27	13.5	S	A	
		공익활동단체 운영 및 사업역량강화 지원	17	9	26	13.0	S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통한 공익활동 인정사업 개발·추진	1	1	2	1.0	C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0	0	0	0.0	N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	1	0	1	0.5	C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14	14	28	14.0	S	A	
		사회문제해결형 경기 도민 공론장 활성화	2	4	6	3.0	B		
		경기도민 공익활동 통합교육체계 구축	1	1	2	1.0	C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4	3	7	3.5	B		
		시민참여영역 협력체계 구축	5	12	17	8.5	S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연계 사업 추진	1	0	1	0.5	C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 조성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	6	6	12	6.0	S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6	5	11	5.5	A		
		(가칭)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 개최	2	1	3	1.5	C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역할 강화	2	2	4	2.0	B	C	
		시민사회영역 전담부서 기능 강화	0	0	0	0.0	N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경기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4	4	8	4	A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1	2	3	1.5	C		

3) 정성분석

가. 목표1: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 도센터와 시·군센터 모두 1기 기본계획 사업기간부터 공익활동가를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음. 교육 영역에서는 역량강화 교육 및 심과 재충전을 위한 지원 등을, 공익활동 운영의 측면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조직운동을 위한 지원, 스타트업 지원 등의 단체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공익활동 주체의 실질적 활동 기반 강화에 기여함.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 방안 마련

- 정책연구를 통한 공익활동 인정사업 개발·추진을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으나, 실제 이행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광명지역의 정책포럼 및 공익활동조사연구 등 일부 시·군의 산발적 노력만 확인될 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함.
- 본 전략과제는 2기 기본계획 수립 당시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

“단순 지원에서 폭넓은 지원체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요.”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82)

-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인정체계 구축으로 실현되지 못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논의가 3기 기본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음.

○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은 공익활동 주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장기 과제로서의 성격을 지님.
- 도센터의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 기반 조성방안 연구’ 외에는 구체적 사업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24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연구와 연계해 ‘비영리일자리 개선 방안을 위한 사례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타 사업 과정 내에서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음.
- 2차 기본계획의 사업 분석 대상 기간이 2023년~2024년 2개년으로 장기 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기에는 짧은 기간임을 고려하더라도 본 과제를 위한 사업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임.

- 다만, 시민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사업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제한적 의의를 지님.

나. 목표2: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 사회 생태계 조성

○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 1기에 이어 2기 기본계획에서도 도센터와 시·군센터 모두 홍보사업을 정량적으로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투입(input) 대비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라는 실질적인 성과(outcome) 창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참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홍보사업에 대한 근본적 접근 전환이 요구됨. 본 연구의 공동워크숍에서는 홍보의 본질과 세대별 맞춤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됨.

“홍보라는 거는 결국에 쌍방향 소통이 돼야”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사람들이 뭘 보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지 세대로 또 다 다르거든요. 페이스북은 40~50대, 인스타그램은 30대, 스레드는 20대 이렇게 다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제 공동 논의’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의제발굴단을 통한 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과 공론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냄.
- 1기부터 제기된 의제 중심 협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확인됨.

“활동과 의제를 같이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32)

“의제 중심으로 만나고 역할을 나누어서 각 기관의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210)

- 2기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요구가 구체적 사업으로 실현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함.

“무슨 공익 의제를 할 것인가? 에 대해 지역별로 모여서 논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제로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합의를 본 의제로 우리 이걸 갖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 실제로 그걸 해내기도 했고. 저는 이런 식의 과정이 참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 2기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단체 및 활동가 대상 교육을 넘어 경기도민 공익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공익활동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그러나 실제로는 단발적 교육 실시에 그쳐 체계적인 교육체계 마련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가대회, 네트워크 간담회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공익활동 주체 간 연결과 협력의 장을 제공함.
- 특히,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은 자원 연결과 민-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함. 이는 행정 차원의 한계를 넘어 민간 영역의 자원을 공익활동과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됨.

“경기도 단위에서 자원 매칭이 필요해요. 행정의 자원이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 단위에서 기업이 됐든 자원매칭을 해서 경로를 달리해서 지원할 방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93)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작동하는 민간 협력 체계 구조화 필요- 시민단체 간, 시민사회와 기업 등 민간 자원 간 효율적 네트워크가 작동되도록 체계화- 지역 안에서, 부문 안에서 활동가들이 서로 잘 연결 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조경훈 외, 2023: 204)

○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

- 도센터 및 시·군센터는 공간대관 및 공유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의 물리적 거점의 역할을 하며, 시민사회 생태계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공익활동 주체 간 네트워킹과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단체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과 의제를 같이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32)

- 물리적 거점공간이 대면 활동과 네트워킹의 장으로 기능한다면, 온라인자료관 등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 접근성 제고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의 기반으로 작동함.
- 이러한 온·오프라인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전략사업들과 달리 기초 인프라 사업으로서 차별적 의의를 가짐.
- 이는 단기적인 성과 달성보다는 장기적인 시민사회 생태계 형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투자임
- 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의 경우 이행과제가 단일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어 정량분석만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공익활동 박람회는 정량분석 상 연 1회 개최로 수치적 실적이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성적 측면에서는 시민사회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가시성 제고와 사회적 인식 확산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님.
- 박람회는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와 의제를 한자리에 모아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의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경기도 내 공익활동 지원체계의 존재감을 제고하는 상징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함.
- 따라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효과성 관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음.

다. 목표3: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이행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는 수단(위원회 운영)과 목적(제도 개선)이 혼재된 과제 설계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본 연구의 공

동워크숍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지적함.

“제도 개선 활동이라고 할 때, 해당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 또한, 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추진체계가 필요함.

“보통은 위원회 말고 실행위원회를 두든, 운영위원회를 두든, 좀 더 소위원회를 두든 그런 활동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 결과적으로 본 과제는 명확한 제도개선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으며, 위원회 역할 강화라는 과정적 활동만으로 정성분석에서 실질적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 본 전략과제는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해 부서-도센터-시·군센터의 연계 협력과 기능강화를 과제의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공익활동 지원체계의 분산성과 조정 기능의 부재가 핵심문제로 지적됨

“센터 아니고도 사실 부서에서도 지원들을 직접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가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통합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저한테 계속 따라오는 것 같고...” (본 연구 공동워크숍 참여자)

- 현장에서는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음.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전담부서 및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39)
“각 기관이 과별로 진행되는 구조라면 시민사회 전반을 볼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해요.”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90)

- 반면, 시·군센터 지역순회 간담회 등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현 체계 내에서 연계·협력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됨.
- 그러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는 단순한 소통채널 마련을 넘어 정책 총괄 기능, 자원 조정 권한, 실행력을 갖춘 조직체계를 의미함. 이는 본질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개편과 권한 재배치를 수반하는 구조적 과제이므로 단기간의 성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시사점

1) 경기도 지원사업의 경향

“제1기 시·군 지역 연결, 제2기 다양한 지원사업 시도에 중점을 두면서 활동가와 단체지원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지원사업 체계는 구축됐다”

- 2019년 조례 제정,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이후 제1기 기본계획 기간(2020~2022년)에는 초창기 기반구축과 시·군 지역과의 연결에, 제2기 기본계획 기간(2023~2025년)의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의 시도와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전국의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은 대체로 ‘단체성장’, ‘활동가 역량강화’, ‘시민공익활동’,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공간’ 등 6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단체’와 ‘활동가’ 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돼 기본적인 지원사업 영역으로 안정화되고 있음.
- 반면 ‘시민공익활동’,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공간’ 등 나머지 영역의 경우 관련된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활기를 띠는데, 이는 정책환경, 지원사업의 발전단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됨.
 - 향후 상대적으로 성장이 낮은 지원사업 영역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요청됨.
- 특히 ‘인프라공간’과 관련해 2022년 11월 북부 센터 개소를 통해 북부지역 공간지원 여건이 개선된 반면, 2023년 4월 도센터(남부센터) 사무공간이 이전하면서 남부지역 공간지원사업이 중단돼 향후 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2)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의 연관성

“제1·2기 기본계획의 과제 중 이행이 진전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행이 미흡하거나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과제들도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제1기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지원”을 통해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제2기는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를 비전으로 설정함.
 - 비전의 실현을 위해 제1기는 4가지 전략, 제2기는 3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함.
- 제1·2기 기본계획의 과제 중 이행이 진전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행이 미흡한 과제들도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제1기 기본계획의 경우 4가지 전략의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공익생태계 역량강화’는 충분한 반면,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공익활동 기반강화’는 보통,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는 미흡으로 나타남.
 - 제2기 기본계획의 경우 3가지 전략목표 중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연결과 협

력 기반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은 이행이 충분한 반면,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행이 미흡한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제1기),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제2기)의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함.
- 두 가지 과제는 각각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수단’과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변화라는 ‘결과’를 지시하고 있어 지원정책 발전의 근본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음.

3) 3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경기도가 지니는 위상과 3기 기본계획으로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지·발전시킬 영역과 새롭게 시도할 전향적인 영역의 균형있는 배치가 필요하다”

- 경기도의 경우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⁴⁾, 전국을 통틀어 3기째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는 유일무이함.
-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의 전국적 위상과 경기도 기본계획이 3기째를 맞이하는 계기를 고려할 때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적 시도가 필요함.
- 이는 단지 정책의 점진적이고 일방향적인 고도화를 의미하기보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영향력있는 정책으로의 발전을 의미함.
-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정책환경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정책의 발전이나 전환을 도모하기 어려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 지원사업으로 긴요하고 안정화된 영역들의 경우 지원사업은 효율화와 안정화를 통해 유지·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여력을 확보하고 시도할 과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력구조 마련을 통한 추진을 병행해야 할 것임.

4) 추진체계 관련1: 민·관 영역 간 협력구조

“현재 관련 정책의 추진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편중돼 있는데, 이후 다양한 민·관 영역을 넘어서는 역할분담에 기반한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역할이 편중돼 있음.
- 물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한 만큼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 하지만 경기도 기본계획의 추진이 지나치게 센터에 편중돼 있고, 그 중에서도 도센터(36.8%)의 역

4)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 않은 바 있음.

할 비중이 높음(6개 시·군센터의 경우 평균 9.8% 역할 비중).

- 특히 담당부서의 역할 비중(4.7%)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적 위상 제고가 요청됨.

<표 II-9> 담당부서, 도센터, 시·군센터 사업 역할 비중

시기	년도	담당부서	도센터	시·군센터
제1기	2020	2	14	0
	2021	1	24	10
	2022	4	17	50
	소계	7(5.7%)	55(45.1%)	60(49.2%)
제2기	2023	3	25	56
	2024	3	22	48
	소계	6(3.8%)	47(29.9%)	104(66.3%)
계		13(4.7%)	102(36.6%)	164(58.8%)

-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관 사업계획이나 담당부서만의 업무가 아님.
- 관련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제5조), 앞서 정책환경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는 전 사회적 과제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냄.
- 이에 따라 담당부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넘어 유관 부서와 기관, 31개 시·군, 그리고 도민과 공익활동단체,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

5) 추진체계 관련2: 시·군 중심주체 형성과 협력 강화

“그간 경기도 광역 차원 중심의 정책추진을 넘어 31개 시·군 기초 단위에서의 시민사회·공익활동 지원정책의 활성화로 주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지난 5년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초창기로서 정책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주로 경기도 광역 중심의 지원사업이 추진됨.
- 도센터를 중심으로 31개 시·군과의 관계 형성과 다양한 지원사업의 시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 시·군을 중심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져 옴.
- 하지만 아직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뚜렷한 정책추진이 수반되지 않거나, 아직 조례 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은 상황임.
- 관련 조례는 시민사회를 도민이나 단체가 공익활동을 펼치는 영역으로 규정하는데(제5조), 여기에는 추상적 차원과 구체적 차원이 존재함.
- 추상적 차원은 경기도 시민사회 전체나 권역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개별 지역을 넘어서는 경기도

의제에 대한 대응이나 경기도와의 협력에 있어서 의미를 지님.

- 하지만 구체적인 차원에서 대다수 도민과 단체들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주된 영역은 시·군 단위 시민사회로 이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저변을 형성함.

○ 향후 31개 시·군 단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은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됨.

-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추진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그 정책적 위상 미확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시·군 단위 저변 강화는 정책적 위상 제고의 기반이 될 것임.
- 아울러 지역사회 현장의 공익활동 지원은 가까이 있는 시·군단위 지원체계가 말고, 광역 도단위 지원체계는 도민과 단체들과 직접 대면하기보다 시·군단위 지원주체들을 지원하고 제도적·사회적 기반 형성에 집중하는 방식의 역할분담 전환도 필요함.

III. 정책환경진단

Ⅲ. 정책환경진단

1. 지원정책의 범주

1) 논의의 흐름

“그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의 지원대상에 관해 비영리단체, 활동가, 참여시민, 그리고 환경(조성) 등에 관한 의견들이 제출됐는데 이는 지원정책 범주 논의의 토대가 된다”

- 정책추진 초창기부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단체와 활동가들이었음.
 -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운영된지 20년이 넘게 경과했지만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재정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조철민 외 2021, 55-56).
 - 규모가 작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다수 단체들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의 소규모 지역 풀뿌리단체 활동가 지원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일반 시민들이 지역 풀뿌리단체 활동할 만한 토양이 마련되어있지 않거든요”(박영선·김성진·신희진 2022, 116)

■ “수백 개의 활동이 어려운 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활동을 멈춘 단체들이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굴이라는 관점을 갖고 걸림돌을 같이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운영방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95)

■ “(단체에는) 상근활동가가 없는 경우도 많고, 활동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사무국은 나보다 형편이 나은 단체에 책상 하나 놓는 정도의 규모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점을 찍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한 팀 정도는 경기 지역의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와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들을 챙기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센터가 더 깊게 도민 체감을 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단체 성장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 성장한 단체가 도민에게 그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조철민 외 2024, 73)

- 특히 코로나19 시기 비영리단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난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는 대책은 찾기 어려웠음.

■ “(코로나19 기간에 단체들의) 회비는 최소 10% 정도 감소했고요. 탈퇴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회비 납입을 위한 통장의 잔고가 없는 회원들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나가긴 했고요. 감염 예방 관련해서 단지 내 소독 같은 것도 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서 소독 행사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시민사회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다 끊었죠. 아, 끊었다는 말은 너무 극단적이네요. 지원 계획을 아예 세우지를 않았죠”(박영선·김성진·신희진 2022, 94, 106, 108)

- 최근 들어 시민들의 공익활동 욕구가 다양화되고, 단체를 통하지 않은 활동들도 증가하면서 공익활동

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 “기존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가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활동에서 공익활동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79, 207)
- “저희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거대한 시민사회 담론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작은 담론을 모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2, 3, 40대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활동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박영선·김성진·신희진 2022, 101)

○ 지원정책이 발전하면서 단체(활동가)나 시민 등 가시적인 지원대상과 함께, 비가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저변을 형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도 점차 강조됨.

- “시민활동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국가적, 정책적, 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공익활동, 마을문제, 사회적경제 등으로 그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조경훈 외 2023, 204)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이예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89)
- “개별사업에 집중하기보다 공익생태계 조성에 집중, 경기시민사회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센터는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역할일 것이고, 이를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조철민 외 2024, 70, 73)

○ 지원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고민은 어렵지만 정책대상으로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 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짐.

- “공익활동의 개념, 사례,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경기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 2019, 69)
- “잘 알지 못해요. 정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저는 시민활동의 범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65).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우리(시민사회)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역할을 좀 사업에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나 또 공익활동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 고민되는 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다”
“공익활동이라는 개념 정리가 어수선하다 ... 공익활동이라는 것의 개념 정의가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잡고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조철민 외 2024, 70, 75)

2) 정책대상으로서 범주 개념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범주는 시민사회 본원적 부문에 관한 ‘주체 지원’과 넓은 의미로서 시민사회 전반의 ‘생태계 조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국가(정부)나 시장(기업)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과 구별되는 의미와 역할을 지닌 영역으로 개념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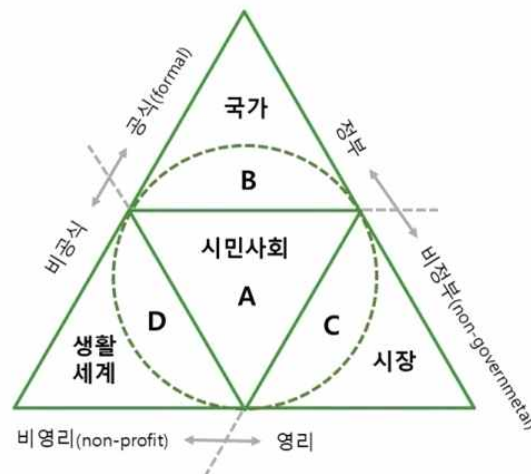
- 페스토프(Pestoff)는 시민사회를 국가, 시장, 그리고 가정과 같은 생활세계 등 3가지 영역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개념화하는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범위와 구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함(Pestoff

1992, 25)⁵⁾.

- 본원적인 시민사회는 비정부(non-governmental), 비영리(non-profit), 그리고 개인들의 일상적인 참여를 넘어 어느 정도 공식적(formal) 성격을 띠는 활동이 이뤄지는 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음(그림에서 A부문). 이 부문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은 개인(시민이나 활동가)이거나 네트워크 등의 형태인 경우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단체들임.

○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본원적인 시민사회 부문과 함께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 융합이 이뤄지는 부문도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B+C+D 부문)로 포괄할 수 있음.

- 시민사회와 정부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거버넌스’나 ‘협치’ 부문(그림에서 B부문)⁶⁾
- 시민사회와 시장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C부문)⁷⁾
-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유연자발집단’이나 ‘비공식 공익활동’이 이뤄지는 부문(D부문)



[그림 III-1] 시민사회의 범위와 구성 부문

○ 우리 사회에서 아직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대상 범주에 관해 학술적·법제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책과 실천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한 개념화에 대한 요청이 높은 상황임.

- 그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정책에 관한 현장의 논의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엄밀하지는 않더라도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개념화는 시도해 볼 수 있음. 이를 출발점으로 향후 지역 시민사회의 공론을 통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 정책대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체 혹은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정책

5) 페스트프는 생활세계를 공동체(Community)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마을공동체 등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생활세계로 표현함.

6) 여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이나 협치,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음.

7)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활동 주체들이 포함될 수 있음.

의 조류가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에서 대상자 간 ‘관계형성’ 중심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정책 대상과 목적을 크게 ‘주체 지원’와 좀 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생태계 조성’⁸⁾ 등 두 갈래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이 두 갈래의 정책대상과 목적에 따라 본원적 의미와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정책대상은 정책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는 인구집단을 의미했지만, 최근 평생학습도시 정책과 같이 지역사회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활성화되고 있음.
 - ‘주체 지원’과 ‘생태계 조성’ 정책의 융합이 낫설 수 있지만 다른 정책 영역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음. 산업정책에 비유하자면 시민사회 지원정책의 범주는 게임 산업, 문화 산업 진흥정책과 같이 특화된 정책(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사회복지 정책 등)에서 소외된 일반 산업(비영리단체) 부문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 산업주체(단체, 활동가 일반)와 이들간의 협력, 그리고 산업 전반의 활성화 기반, 즉 산업생태계(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주체 지원’에 있어서는 주로 본원적인 시민사회(A부문)가 연관되며, 주로 단체(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활동가)를 위한 지원과 이 부문에 진입해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개인 혹은 모임)이 지원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B), 사회적경제(C), 마을공동체(D) 등은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에 포함되지만, 해당 제도·정책 소관임.
 - 자원봉사단체, 국제개발협력단체 등은 개별 정책에서 정하는 역할과 관련해 지원을 받으면서, 공익활동단체로서 겪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해서는 시민공익활동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됨.
-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A+B+C+D부문)가 모두 관련됨. 이에 따라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주체 간 연결과 협력,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의 사회적 인정·지지 증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짐.
- 생태계 조성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제 부문에 공통 토대를 구축하여 개별 제도·정책에서 다루기 어렵고 시민공익활동 지원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함.

8)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책용어인 ‘생태계 조성’은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혁신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표 III-1> 시민공익활동지원 정책의 대상과 목적

정책대상·목적	관련 부문	내용	비고
주체 지원	A	=본원적 의미의 시민사회 부문에 진입하는 시민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지원	=주민자치회(B), 사회적경제(C), 마을공동체(D) 등은 해당 제도·정책 소관 =자원봉사단체, 국제개발협력단체 등은 개별 제도·정책의 적용을 받으면서, 공익활동단체로서 일반적인 사항은 시민공익활동 지원대상에도 포함
생태계 조성	A+B+C+D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주체 간 연결과 협력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의 사회적 인정·지지 증진	=생태계 조성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제 부문에 공통토대 구축으로 개별 제도·정책에서 다루기보다 시민공익활동 지원정책에서 다룸

2. 정책환경의 영향

1) 정책환경의 변화 동향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2022년 정권교체와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퇴가 나타난 후 최근 조기 대선을 계기로 다시금 변화가 예상된다”

- 한국의 시민사회 정책은 ‘통제’와 ‘동원’ 중심의 흐름이 오랜 시간 이어져 오다가(조철민 2015), 최근 들어 정치적 환경에 따라 부침은 있지만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
 - 민주화 이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2000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유의미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남.
 - 하지만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이 발전으로 나아가기보다 정권의 성향 등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는 불안정성을 나타냄.
- 이후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유의미한 흐름은 중앙정부보다는 개혁적 성향의 지방정부로부터 형성됨. 2009년 광주NGO센터 설립부터 2010년대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조례 제정, 중간지원조직 설립, 관련 정책사업 추진이 진행됨.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지역으로부터 형성된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주창활동으로 ‘시민사회활성화 6대 법률’ 제·개정의 움직임도 나타났지만, 결실을 맺지 못 함⁹⁾.
-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 및 2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중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9)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공익활동가공제회법 제정 등 6가지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됨.

회계감사 실시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정책환경의 악화 경향이 나타남.

- 1980년대 말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이 시작된 지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치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

○ 2019년 조례 제정과 함께 본격화 된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정책은 최근의 부정적인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하지만 경기 지역 시·군에 있어서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전환 등 202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침이 나타나는 가운데, 안양시의 경우 새로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추진되기도 함.

○ 2025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다시금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함.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4개 분야로 구성된 시민사회 공동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함¹⁰⁾.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시민의회 추진,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키로 협약¹¹⁾

○ 이재명 정부가 수립한 123대 국정과제 중 9번째 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에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을 포함함(국정기획위원회 2025, 41).

<표 III-2> 제21대 대선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정책제안

정책과제 분야		세부 과제
1	시민사회 영역 총괄 제도 마련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2	시민사회 전담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3	시민사회 규제 혁신: 6대 규제법 개선	①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② 보조금법(보조금·지방보조금법) 개정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④ 민법 ‘비영리법인 설립제도’ 개정 ⑤ 민간위탁제도 개선 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4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4대 정책과제	① 주민자치 참여제도 기반 구축 ② 사회혁신기금 및 시민자산 조성 ③ 문제해결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④ 시민사회 연구조사 및 데이터 구축

10)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한국지역재단협의회,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 네트워크들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로서 2017년 대선 시기부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11) “이재명 선대위, ‘광장 목소리’ 입법 위한 독립기구 설치 검토”. 시사저널. 2025. 5. 17.(<https://v.daum.net/v/20250517191503941>).

2)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제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은 정치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향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의 이해관계자들도 정치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음.
 - 정책 출범시기인 2019년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정책의 ‘환경조성과 도민인식제고’에 85%의 응답자(매우 그렇다 47.1%, 그렇다 37.9%)가 중요하다고 답변함(경기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 2019, 66).
 -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책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출됨.

■ “두 번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정치세력화에 큰 기대를 가졌다가, 그 다음 선거에는 거둬들여 지기도 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30)

■ “단체장의 의지가 커요. 단체장이 바뀌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퇴직한 공무원들이 시장의 재선과 삼선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독립된 성격으로 가지 못해요. 이런 기관들을 조사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 변화에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행정의 수장이 바뀌면, 잘 지내다가도 안 돼요. 이번에 바뀌면서 힘들어졌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69, 172-173, 187, 213)

■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순간 ... (오해가 생기고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 여타의 바람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정이 관여가 너무 많다. (경기도가) 시민사회에 좀 폭넓게 위임을 하고 맡기는 게 필요하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행정을 움직였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자치력이 없고 행정에 포섭됐다는 평가가 있다”

“경기도와 단체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보다 경기도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았나 싶다”(조철민 외 2024, 66-67)

- 정치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도 제출되고 있음
 - 아직 단초 수준의 의견들이지만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의 민관협치체계 구축, 시·군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과 지지 제고, 제도개선 등 시사점을 제공해 줌.

■ “단체장이 누구로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일정하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35)

■ “마을공동체도 보편적으로 되었어요. 27개 정도의 시·군에 마을센터가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어요. 보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5개, 3년 정도 되었어요. 지역적 기반과 공감대가 낮은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센터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 있지만, 준비과정에서 약간 보호받는 느낌이 있고, 아직 행정도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정에서 민관협치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회적 권위와 지역적 권위를 획득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70-171)

■ “우리가 하는 중간지원조직 체계 운영은 100% 행정에 의존하고, 정치 상황이 달라지거나 행정의 입장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을 받는 곳의 운영인이라 정부의 의견과 격차를 좁히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공익지원센터인 만큼 의견의 자율성이 매우 존중받을 수 있는 내부 문화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업에서 참여자의 문서 작성 시, 정치적 이슈와 현안이라 수정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행정의 집행을 위한 하부 단위처럼 ... (변해 갈 우려도 있다) ...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게 ... 조례도 좀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대는 행정과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 이를테면 공무원의 언어를 시민사회에 잘 전달

하고, 시민사회의 언어를 행정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인데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조철민 외 2024, 66-67)

3.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1) 시민사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현실

“정치환경과 시민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인식 형성이 더딘 현실은 지원정책의 발전에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닌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시민사회에 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공익활동과 지원정책 현장이 겪는 어려움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옴.

■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저 사람들 할 일없어서 한다는 인식도 많아요”
“공익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해가 일반시민들에게 필요해요. 공직자들도 사실 담당 업무를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한 보험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보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 홍보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10%대인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부당한 측면은 있어요. 언론의 이념적 공세와 같은 정치사회적 배경, 조건, 환경도 있어요.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개별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민사회활동 중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발굴하고 계속 알려내는 것,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사회 활동이 강해지면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관점에서, 계속해 찾아 발굴 알려내야 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76, 200, 205)

■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말 정치권으로 간다 ...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민단체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
“5년 동안 우리 동네 축제를 해줬는데 욕먹는 거고 ... 너 뭐 많이 먹었지 축제하는데 우리 인건비 하나도 안 나오지 않나”

“결국 사회인식 자체가 시민활동이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공익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 하는 거 없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비대해져 있다”

“(공익활동을) 자원봉사로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돈을 가져가냐는 인식이 있다 ...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비영리 또는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그것이 요 경계에 있어 ... (인식상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시민사회가 뭔가 그냥 민원을 야기시키는 어떤 문제적인 집단의 사고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다”

“시민사회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가장 큰 역할이 기존의 행정 추진 체계나 기존의 제도나 문화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 ... 이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 단계를 ... 사회적으로도 인정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인정해야 된다”

“자기 인생 전부 30~40년을 그냥 투척해서 활동한 사람은 그냥 늘 그래야 되는 사람으로 치부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집에서 지지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조철민 외 2024, 66, 75-76)

- 사회적 인식 부족의 원인으로 정치적 편견과 오해, 공익활동 주체들이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시민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시민사회 주체인 시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고 견인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117)

■ “참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생각해 보면 기존 내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은 많이 변화되었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 각자도생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맛을 보게 할까, 연결의 맛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예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202)

■ “시민단체,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이 약화되었음. 내부적으로는 주체들의 역량 한계, 외부적 원인으로서는 기득권, 정치 및 행정권력에 의한 이념적 공격도 한 원인으로 작동- 공익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이며, 서울, 인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짐. 시민이 시민사회 활동과 거리를 두고, 시민사회에 속해있다는 정체성이 부족함”(조경훈 외 2023, 203)

-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한 한탄이나 수동적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지니는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
 -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인류의 본성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단체는 대부분의 민주적 국가들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임.

■ “시민사회는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우리 인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악과 불의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함께 모여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운다. 시민사회는 그러한 집단적 행동의 표현이다. 강력한 시민사회를 통해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사회를 형성하고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투투(Tutu, D.) 주교(WMD 2012, 3)

2) 사회적 인식 증진 방안 모색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대중과의 관계형성의 관점에서 기존에 추진해 온 홍보를 넘어 보다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경기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인식 부족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그리고 관련 정책을 알리는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시민들이 체감을 하면 없어질 수 없”고 “활동의 영향은 시민들이 받아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 사회적 인식개선은 정책의 위상과 안정성 확보와도 연관됨(조철민 외 2024, 70).

■ “시민사회가 개별단체로 수행할 수 없는 공익활동 인식개선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홍보가 필요. 공익활동하는 단체들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연계하는 역할도 중요. 도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필요”(경기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 2019, 69)

■ “시민사회의 핵심은 우리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해요. 시민사회단체가 새롭게 시민사회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안내해 줄 입구 역할을 해주어야 해요”

“발랄한 홍보물들이 나쁘진 않으나, 일반 기업처럼 홍보하려고 해요.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장을 형성하고 관계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공익활동 인식개선을 경기도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과 공익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해요. 정보공개가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정보공개가 되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보지 않아요.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78, 205, 208)

■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사회영역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면 ‘아, 빨갱이’ 이런 반응이 돌아오거든요. 평화운동은 당연하고요. (...) 혹은 제3섹터를 키우라는 권고가 있으니까 돈을 적당히 나눠주고 행정에 하기 귀찮은 일을 떠맡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시청이나 구청에 강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고요. 활동가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막연하지만 꿈같은 얘기를 해봅니다”(박영선·김성진·신희진 2022, 114-115)

■ “다양한 공익활동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홍보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익광고 만들어서 홍보해주세요”(조철민 외 2024, 47)

- 사회적 인식 개선이 “단순 홍보”라는 정책수단만으로 충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 “시민과의 접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주문하고 있음(조경훈 외 2023, 204).
 - 광고와 달리 홍보(Public Relations)의 본질적 의미가 ‘대중과 관계 맺기’임을 상기하면 이와 같은 접근은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로 볼 수 있음.
 - 이는 단기간에 완수될 수 있기보다 “계속 장기적으로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고, 이는 “센터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임(조철민 외 2024, 70).
 -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 모색은 본 연구 과업지시서의 주안점이기도 함.
-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인식개선을 넘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나 연구, 제도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함.

■ “공익활동을 사회가 예우해 주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 시민사회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선언적으로라도 조례에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중략)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에 가점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들 대상 교육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봐요. 정규교과과정에 들어가면 좋지만

쉽지 않아요. 교원연수원이 시·도별로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비영리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를 인정하고 오랫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비영리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를, 정부가 이를 평가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변화가 와야 공간의 문제에서부터,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연구자들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세워서 논리와 내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 (중략) ... 시민운동적 가치가 아닌,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 시민사회의 가치가 인정받아야 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76, 186, 191, 197, 220)

■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동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증체계 및 보상체계를 만들고 존중하는 제도를 통해 지속적 참여 독려”(조경훈 외 2023, 204)

■ “시민사회 단체 활동이나 봉사 그런 측면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자괴감이 드는 게 ... 내가 그동안 20년, 30년 했는데 남은 게 뭐야 야 너 거기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살래 사무실 맨날 월세도 못 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른 일거리 찾아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 ... 그동안 활동해 왔던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버리지 않고 지켜보는데 그래서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증제 같은 걸 하든 ...”(조철민 외 2024, 75-76)

4. 공익활동의 경제적 가치 조명

1) 경제적 가치 부각의 흐름

“시민사회 공익활동 본연의 정치·사회적 가치와 함께 그것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경제적 토대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 우리 사회보다 먼저 시민사회가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일자리의 성장은 둔화된 반면, 시민사회 부문의 일자리는 활성화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리프킨 2012, 381-383).
- 비영리 공익활동은 언제나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왔지만, 그 자명한 사실은 대부분 간과되어 왔음. 이제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경제적 측면을 인정할 때가 됐음.
 -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비영리 부문이 하나의 명실상부한 산업영역으로 인정받고, 이에 합당한 사회적 인정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시민사회 공익활동이 창출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가치로 국내총생산(GDP) 혹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분을 들 수 있음.
 - 비영리 부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식적 통계나 연구가 일천한 가운데 과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비영리 부문의 국내총생산 기여율은 3.92%, 2006년 비영리 부문 고용 기여율은 6.6%로 나타남(김혜원 외 2009;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 2010).

- 모든 세대에서 일정 비율의 인구는 비영리 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위한 충분한 직업선택의 기회 마련을 위해 비영리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한민국 헌법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전문)” 하며 “직업선택의 자유”(제51조)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비영리일자리는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층, 경력단절 후 사회에 재진입하거나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을 원하는 인구의 고용대책으로 부각되고 있음.
- 아울러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 활동의 지속을 위해 경제적 자원과 기반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전통적인 경제적 자원의 원천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정의 지원(보조금 등)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기본적으로 기부와 정부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자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지역자산화(local commons),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사회적영향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음(이환성 외 2021, 293).

2) 경제적 가치 활성화의 필요성

“시민사회 공익활동이 지닌 경제적 가치와 요구를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정책위상 강화와 사회적 인식제고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시민사회의 경제적 가치 및 기반에 관한 현장의 경험으로부터의 의견들을 제출해 왔음.

■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활동을 일자리 정책 관점으로 전환하여 고용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청년 일자리 사업 등)”

“(공익활동 영역 일자리와 관련해) 공익활동 영역에서도 주요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 고용정책을 통해 비영리 분야에서도 청년 지역주민의 합류가 가능한 정책구조 필요. 청년 인턴 등의 정책은 지역의 자원이 되며, 단체에도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 사회적 금융 조직, 사회단체 등이 연대하여 소셜뱅크설립 등을 검토해봤으면 함 ... 민간 중심의 지역재단 운영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지역의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조경훈 외 2023, 204, 211)

■ “일반적인 사회적 일자리가 경제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면, 시민사회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해요. 공익적 활동이 사회적 일자리로 인식되느냐가 중요해요”

“비영리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자리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는 문제예요. 상공회의소도 기초단위까지 지원하는데, 경기도에서 시민사회를 지원 ...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지역의 자원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일정 부분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체계, 사회자산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 시민자산화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생각해 봐야 해요. 공동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공동체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집에 있는 주부들이 나와서 공익활동을 하고자 할 때, 소규모로 하고 싶고,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을 하고, 일한 만큼 성과가 있다면 인건비를 그 일한 몇 시간에 맞게 지원하면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요. 나중에 사회에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예요”

“공동체이익주식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이건 반드시 선행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177, 186, 188, 191-192, 222)

○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관련 조례 개정과 연구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 2021년 관련 조례 전부 개정시 ‘비영리일자리’ 관련 조항을 신설함. 이는 타 시·도의 조례와 차별성을 지님¹²⁾.
- 아울러 비영리일자리 관련 정책토론회(2021),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2023), 비영리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책연구(2025) 등을 추진함.
- 경제적 가치 활성화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의 정책적 위상 강화와 사회적 인식과 지지 제고에 있어서도 간접적인 효과를 지닐 것으로 판단됨.

5. 정책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참조

1) 국내사례: 시·도 지원사업

“전국 시·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유형이 형성되는 가운데, 단체·활동가 지원은 ‘필수’,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선택’, 나머지 기반조성 관련 유형들은 ‘부족’의 경향을 보인다”

○ 2023년 수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의 주축을 이루는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서 대체로 ‘단체성장’, ‘활동가 역량강화’, ‘시민공익활동’,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 공간’ 등 6가지로 유형이 나타남(박영선·김유리 2024, 27-28)

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표 III-3> 시민사회 정책 시·도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내용(2022~2023)

중간지원조직	단체성장	활동가 역량강화	시민공익활동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 공간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남·북부 사무소)	=비영리스타트업 =경기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원 =공익활동 상담소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지원	=공익활동가 학교(새싹과정, 전문가과정, 리더십과정) =활동가 교육비 지원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공익활동가 충전소) =실무역량강화교육(시민e음 교육)		=31개 시·군 지역 네트워크 =1기업-1단체 공익 캠페인 =경기 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중간지원조직 협력사업 및 공동 워크숍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구축 및 운영(툇) =정보아카이브 운영(아카이브 에디터 운영)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상담소(수요상담소) =집중실험실(공익활동퍼머언딩) =단체 네트워크 지원(함께하는 포럼)	=활동가 장학지원 =활동가 학습플랫폼(판)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교육(글쓰기 교육 등) =신입 청년 공익활동가 육성 아카데미 =공익활동가 특성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육영상제작 지원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의제공론장 지원) =공익활동 커뮤니티 모임(당신들의 공익활동)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협력	=공익정보 아카이브(변화사례 아카이브, 트렌드리포트 발간) =시민사회포럼	=공간대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조직역량강화(변화의 여정) =인큐베이팅(비영리스타트업) =공익활동 상담(공익램프 터너)	=활동가 연구지원 =직무역량교육 =경험공유워크숍 =세대별·주제별 활동가 연수: 리더십 아카데미, 리더 활동가 워크숍 =주제별 활동가 커뮤니티: 활동가살롱	=공익활동 동아리지원(소소모) =시민의제 발굴(모디회담)	=부산 시민사회 의제 협력 =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 협력 =청년·NGO일경험 지원 =공익활동가 일자리 지원	=공익자원플랫폼 =시민사회 아카이빙 =단체 웹드라마 제작 지원 =시민사회컨퍼런스-부산시민사회활성화포럼(활활) =시민사회 연구조사	=공간대관

중간지원조직	단체성장	활동가 역량강화	시민공익활동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 공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빙랩모델 발굴(좋은변화 실험실) =프로젝트 지원 및 홍보 지원 =단체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익단체 운영 상담 =초기 공익활동 팀 또는 단체 지원(스텝업)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 =시민 교육기획사업 지원(삼삼오오) =단체 내부 교육 지원(역량업) =활동가 학습지원	=시민 공익활동 지원(공익활동 씨앗 도전사업)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실천형 공익활동 아카데미)	=공익활동 이야기주간- 공익활동 정보플랫폼 =공익활동 시민 커뮤니티 운영(모두의 커뮤니티) =민관협력(중간지원조직 협력 등)	=아카이브 운영	=공간대관 =사회혁신 전문도서관 운영(분홍돌고래)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조직강화 지원 =소셜펀딩 활성화 지원(재정조달 역량강화)	=공익활동가 맞춤형 성장지원 =공익활동가 학교(학습 소모임 지원, 인문사회강좌 운영)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교육연수		=광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한마당	=공익활동 아카이브 지원(공익활동 및 기록물 제작 등) =광주시민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조사연구(시민사회포럼)	=단체 사무공간 지원(풀뿌리 소셜랩 운영)
대전 NGO지원센터	=NGO성장 프로젝트 지원(모금컨설팅) =단체 협업지원(NGO믹싱프로젝트) =미등록 단체 상담 지원 등	=학습모임 발굴 지원 =실무 역량강화 =맞춤형 학습지원 =활동가 연구지원(슬기로운 연구활동) =공익활동 사례 학습 지원(NGO스텝업)		=대전 공익활동 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제 발굴(의제발굴단 구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단체 매칭 연계: 22년 종료) =공익활동 자원연계(분야별 간담회)	=공익활동 서포터즈 양성(단체 홍보영상, 대학생 서포터즈 연계) =아카이브 구축 =NGO 팟캐스트 운영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정책수립 연구 =정책토론회 및 포럼(시민사회변화포럼)	=공간대관
울산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단체 지원 및 협업: 소모임 성장지원	=시민활동가 육성 지원: 비영리 회계실무, 보조금 회계실무, 노동법, 글쓰기 등			=정책플랫폼 구축: 아카이브 운영 =조사 및 정책 지원: 공익포럼	

중간지원조직	단체성장	활동가 역량강화	시민공익활동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 공간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사회변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스타트업(시소) 지원 =단체 설립 및 운영 컨설팅	=IT협업도구 교육 =신입활동가 아카데미 =사회성과관리 컨설팅 =비영리 실전 회계와 세무		=NGO 페스티벌 =활동가 이야기모임(톡톡)	=포럼(충북시민사회포럼) =조사·연구 등	=인큐베이팅 공간/연대기구 사무공간 지원 =단체 업무환경(노트북) =NGO 도서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단체설립 및 운영지원 =시민사회 의제 연구조사 =자립역량강화 지원(할로개척)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충남공익뿌리) =조직성장지원(충남공익안녕)	=활동가 교육: 실무역량교육, 공익활동연수, 신입활동가 아카데미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공익강좌 개설 지원 =단체 운영역량강화 교육 =자치분권 지역리더아카데미	=시민 공익활동지원(충남공익씨앗) =시민사회 과제해결 지원(다행) =사회혁신실험실(달콤Lab, Meet-up)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중간지원조직협의회,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협력	=공익활동 사례 아카이빙(충남시민사회연간보고서, 충남시민사회史, 충남시민사회인) =충남공익활동컨퍼런스	=공간 지원(공유공간) =도서관 운영(결음)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단체 설립 지원	=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모금아카데미, 현장 퍼실리테이션 지원, 리더십 과정 등) =단체 현장강좌 지원	=시민 대상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검도, 대금, 몸살림 마음살림		=경남 공익활동 정보 수집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연구조사 =정책토론회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 현장방문·교류 지원 =시민 공익활동 입문 프로그램 지원 =공익활동 상담·컨설팅	=찾아가는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단체 운영 안정화 실무 지원(IT역량강화 교육) =공익활동가 기획연수 지원(사례 벤치마킹) =행정·대학·시민사회 간 연계		=공익활동 네트워크·연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대, 공익활동단체 인권증진 개선 사업, 타 시·도 사업 교류		

○ 지원사업의 6가지 유형별로 다른 발전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필수적인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시민공익활동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시도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뉨.
- 나머지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 공간’ 등 기반 구축이나 생태계 조성관련 지원사업 유형들은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남.

○ 경기도 역시 ‘단체성장’과 ‘활동가 역량강화’ 관련 지원사업이 안착된 가운데,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부분도 지원사업이 활성화됨.

- ‘인프라·공간’ 영역의 경우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다가,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이전 이후 사정상 중단된 바 있음.

2) 국외사례: 각국의 유관정책사례¹³⁾

“각국의 유관정책사례로부터 정책추진 역할분담, 부서 간 협력, 비영리일자리, 기부 활성화, 지역거점 등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포착할 수 있다”

○ 정책추진 역할분담: 영국 ‘시민사회 전략’(civil society strategy)

- 2018년 영국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시민사회 전략: 모두를 위한 미래 만들기’(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와 협의를 위한 국가기구)를 수립해 시행함¹⁴⁾.
- 특징적인 것은 시민사회 활성화는 특정 부서나 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시민, 지역사회, 시민사회, 기업, 정부 모두의 책무로 규정하고 각 주체가 추진해야 할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공익활동지원센터뿐 아니라—물론 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만—다양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III-4> 영국 시민사회 전략의 5대 주체별 과제

영역	주요 내용 및 특징
사람 (People)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기여 복돋우기 -정부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리고 서로 연결되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신과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사회 지향 -훈련된 공동체 조직가(Community Organizer)를 2020년까지 3,500명 양성: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를 연결 -15~17세 청소년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전국시민봉사신탁(the National Citizen Service Trust) 설립: 시민사회조직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사회참여 및 진로 지원
장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투자

13)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문헌을 주로 참조했음. 이광희 외 2022, 220-264.

14) 영국 정부 ‘시민사회 전략’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ociety-strategy-building-a-future-that-works-for-everyone>)

(Places)	-민간부문, 서비스 제공자, 개인 및 지역사회와 함께 장소 기반 정책을 만들고 사회경제적 성과 추구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주택부서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공간을 만드는 협업 -공동체 만들기 등을 통한 지역자산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갖도록 유도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모금 모델 개발
사회 부문 (Social Sector)	-민간단체와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협약 발전 -시민사회의 발언력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비법률적인 방안 모색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부자 풀(pool) 구축 및 기부 활성화 -사회적 부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민간부문 (Private Sector)	-공공선을 위한 사업, 금융, 기술의 진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포용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킴 -금융적인 배제 없이 독립적인 조직들이 파트너들과 일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Lottery Fund)과 협력
공공부문 (Public Sector)	-협력적 권한위임 보장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이자 전달자로서 시민사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부문 조직들과 상호협력 -공공조달 구매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촉진(사회적 가치법에 근거)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적 가치가 적용되도록 함

○ 부서 간 협력: 스웨덴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와 협의를 위한 국가기구’(NOD)

- 스웨덴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를 지원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와 협의를 위한 국가기구’(Nationellt organ för dialog och samråd mellan regeringen och det civila samhället, 이하 ‘NOD’) 설치·운영 중에 있음¹⁵⁾.
- 이 기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책영역과 관련된 시민사회(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 부처와 청소년단체)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지원함.
-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는 담당부서(경기도의 경우 소통협치관실 도민협력팀)만의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부서에서 각 정책영역과 관련된 시민사회 부문 간 지원·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예를 들어 여성정책과와 여성단체). 다양한 부서에서 이뤄지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일자리: 미국 비영리단체 지원 정책

- 미국의 시민사회는 비영리 부문의 관점에서 공익성을 띠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간주됨. 2020년 조사에서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180만 개를 상회하고, 시민들의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신뢰도 높음. 비영리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고용규모도 1,200만 명을 상회해 소매업, 숙박업·요식업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방 노동부에서는 비영리 부문 관련 공식 통계를 작성하며 정부는 비영리단체들을 지

15)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와 협의를 위한 국가기구 홈페이지(<https://www.nodsverige.se/om-nod>).

원하는데, 가장 큰 축은 조세 혜택과 보조금 지원임.

- 연방 세법은 정부의 조세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범위와 자격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조세 혜택은 크게 비영리단체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감면과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개인·법인의 소득세 감면으로 분류되는데, 혜택의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큼.
- 아울러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연방보조금과 협력에 관한 법(The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ct)’에 따라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됨.
-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업자들로 볼 수 있음. 이들이 유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그리고 유의미한 비영리일자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기부활성화: 폴란드 ‘백분율 세금 지정제도’

- 백분율 세금 지정제도(Percentage tax designation)는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시민사회 지원제도임. 대표적인 사례인 폴란드의 경우 국민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호하는 단체에 후원하도록 연결하고 있음(단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기금으로 귀속된 후 정책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지원에 사용)¹⁶⁾.
- 폴란드 정부는 이 제도를 기부나 구호가 아니라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기제로 설명함.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을 활성화하는 범국민 캠페인적 성격과 함께 인지도가 낮은 단체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사용내역을 공개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됨. 2019년에는 1,5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한 바 있음.
- 백분율 세금 지정제도를 우리 사회에 바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매우 유의미하며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도를 좀더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지원거점: 에스토니아 ‘지역개발센터’

- 에스토니아는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기구인 ‘국가시민사회재단’(Kodanikuühiskonna Sihtkapital, KÜSK)을 운영하는 한편, 15개 주(州)별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개발센터(Maakondlikud arenduskeskused, MAK)를 운영 중에 있음¹⁷⁾.
- 지역개발센터는 지역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능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는데, 연방정부의 국가시민사회재단은 각 지역개발센터의 시민사회 지원부문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16) 폴란드 NGO포털 홈페이지(<https://poradnik.ngo.pl>).

17) 에스토니아 지역개발센터 홈페이지(<https://www.arenduskeskused.ee>)

- 지역개발센터 시민사회 지원부문은 관내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훈련 및 기타 지원사업을 수행함.
- 지역개발센터 사례는 중앙과 지역, 경기도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광역(도)와 기초(시·군) 간 지원의 거점과 거점 간 유기적인 연결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함. 참고로 15개의 지역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130만명 규모임.

<표 III-5> 에스토니아 지역개발센터 시민사회 부문의 주요 기능

기능	주요내용
컨설팅	영감을 주는 리더, 조직창립, 조직운영 역량강화, 단체조직관리, 단체자금조달, 단체 프로젝트 컨설팅, 조직개발, 조직합병·분할·해산
교육훈련	단체 활동가, 회원,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제공
기타	지역별 연찬회, 사회적 인정 행사 등

Ⅳ.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결과분석

Ⅳ.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결과분석¹⁸⁾

1. 워크숍 개요

1) 참여형 계획 수립의 의미

- 본 연구는 3기 기본계획 추진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연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형’ 방법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정책연구는 시민사회 현장의 요구에 조응하고 시민사회 주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
 -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과 함께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계획의 구체성이 담보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최근 정책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의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주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참여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참여형 계획수립(participatory planning)은 그 세부적 방법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정책과 실천현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임.
 -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시민사회 현황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인식, 정책 수요에 관한 기초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는 점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초조사나 양적 조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익활동 현장의 참여에 바탕을 두고 속의형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워크숍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 본 연구에서는 이론 탐구, 문헌 연구를 통한 해석과 담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기반해 연구진이 이후 실제 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참여할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워크숍을 기획·진행하였음.

2) 워크숍 개요

가. 목표

- 1·2기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 및 제도 진단, 3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 비전 체계도(안) 작성을 목표로 삼았음.

18)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의 발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옮겼다. 일부를 인용할 때는 작은따옴표에 담았다.

나. 구성

-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표하는 주체들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집중적인 논의와 숙의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음.
- 워크숍 참여자는 활동지역과 활동 분야가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했으며, 성별 비중을 고려하여 9명 선정함.
- 공식 참여자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참석하여 워크숍을 지원하였음.

<표 IV-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여자

이름	소속 및 직책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대표
서진숙	양평경실련 사무국장
안영옥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상우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다. 진행

- 연구진은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핵심 주제에 관한 초안 및 타 광역 시도 기본계획 사례 등 매 워크숍 주제와 관련한 참고 자료 사전 제공
- 주제에 따라 워크숍 전에 질문지 배포, 사전 의견 조사 실행
- 참여자들은 연구진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전 학습하고, 주제를 숙지한 후 워크숍 참가
- 매 워크숍을 마친 후 연구진은 다시 워크숍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1·2기 기본계획 평가와 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설계
- 총 4회로 기획된 워크숍은 매회 3시간 정도 진행

라. 워크숍 경과

- | | |
|----------------|--|
| • 연구진 분석작업 | - 이행성과평가 및 정책환경진단 결과와 담론화 논리 초안 마련
- 이행성과평가 및 정책환경진단에 관한 참여자 사전 의견 조사 |
| • 1차 워크숍(6/17) | - 이행성과 평가와 정책환경진단 논의 1: 비전·전략 및 이행성과 평가 |
| • 연구진 후속작업 | - 이행성과 평가와 정책환경진단 담론화 논리 구체화 |

- 2차 워크숍(7/30) - 이행성과 평가와 정책환경진단 논의 2: 정책환경분석과 담론화 논의
- 연구진 후속작업 - 제3기 기본계획 개요 및 사례
- 3차 워크숍(8/28) - 제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논의 1: 비전과 전략목표
- 연구진 후속작업 - 제3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구체화
- 4차 워크숍(9/23) - 제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논의 2: 정책과제 도출 및 종합 논의
- 연구진 후속작업 - 제3기 기본계획(안) 세부 내용 작성

2. 주제별 주요 논의 결과 [1]: 기본계획의 의의와 이행과제 및 사업 평가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의 과제는 아래와 같음.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
3.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방안
5. 공익활동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9. 비영리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11.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12.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13.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본계획은 법령에 근거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의미
 -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본계획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현황 분석 및 여건을 진단함.
 -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구체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도 함.

- 경기도에서도 이런 절차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두 차례 수립
 - 1기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지속할 수 있는 공익활동 성장지원’을 목표로 설정함.
 - 2기 기본계획에서는 비전으로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목표로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 체계 구축’을 제시함.
-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인식
 -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1·2기 기본계획을 ‘공익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활동가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인식함.
 - 기본계획이 행정 문서를 넘어 공익활동 현장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
 - 공익활동가들은 전체적으로 “1기의 기본계획의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전략 아래 민관합동 워크숍, 지역 간담회, 청년 활동 참여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었고, 2기에서는 ‘실효성 있는 주체 지원’ 전략에 따라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과 교육, 상담소 운영 등이 활성화”되었다며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함.

2) 1·2기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가. 총평

-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현실에 부합하여 수립되었는지, 목표와 전략은 실현 가능한지, 비전과 목표·이행과제가 상호 조응하는지 등의 관점에서 논의함.
- 전체적으로 1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음.
- 2기의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라는 비전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1기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1기와 2기의 비전과 목표, 전략이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세워졌는지’에 평가는 부정적이었음.
- ‘2기 목표와 전략에서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대신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이라는 확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쉽다’라는 의견도 제시됨.
- ‘2기까지는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과 터다지기 작업을 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에서 ‘도민으로의 확장성은 앞으로 꼭 해야 할 과업이지만, 2기부터 비전에 넣은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평가함.

나. 세부 평가 내용

- 평가 1: 계획과 현실의 괴리
 - 1기와 2기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 전략,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의견은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본계획이 ‘과하다’는 것이었음.

- 즉 ‘기초 다지기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비전을 확대’해서 경기도의 ‘현황’에 부합하지 않고,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이에 따른 전략 또한 ‘1·2기에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임.
- 한 참여자는 기본계획이 경기도 시민사회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망라하게 된 배경을 ‘간절함과 굶주림’으로 해석하였는데, 참여자들이 많이 공감하였음.

“너무 과한 목표 설정을 했어요.”

“이건 다 하면 좋겠어. (...) 장기적 과제를 1기, 2기로 갖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 1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거기 안에서 생태계 강화만으로도 해도 되는데, 사회 문제 해결까지 집어넣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결 의지가 있는 집단이거나 이미 그런 경험치가 쌓인 집단들과의 소통으로 대상이 협조해질 수밖에 없고(...)”

“(전략으로 제시된)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민관 협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대,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시민사회의 규모와 상황이 어떤지 파악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목표의 최선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창대하게 꾸는 것이 맞는 것이나 실제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 (...)”

○ 평가 2: 기본계획에 따라 수행된 많은 사업이 ‘다음이 없다’

- 다수의 참여자가 경기도의 공익활동 정책과 사업에 ‘다음이 없다’는 점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첫째는 평가를 통한 지속성 확보에 관한 문제. 참여자들은 일회적으로 지원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사업 프로그램이나 지원받은 사업 주체가 이후 성과를 확산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지원사업의 성과에 기반하여 다음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 과정이 미진하여 사업이 단속적으로 끝나고 마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지적함.
- 이후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과정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둘째, 다음이 없는 제도와 관행은 사람(활동가)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강조됨.
- ‘넥스트의 핵심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특히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넓었음.
- 향후 지원사업의 넥스트 레벨, 즉 지원사업의 심화는 ‘사람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많은 참가자가 지원사업을 사례로 삼아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는 지원사업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자, 공익활동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17기의 역량강화라든가 청년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긴 했지만, 그 다음은 없더라고요. 그때뿐인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새싹 과정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은 없어요.”

“저도 다음이 없다고 느낍니다. (...)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 주도형 센터나 지원사업은 다 다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4년, 길면 5년까지 지원해도 눈감아 줄 수 있는 용감함이 정부에 생겼으면 좋겠고.’”

○ 평가 3: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는 ‘경기도’, 경기도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이행이 중요함.

- 기본계획 수립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조례상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도지사의 책무라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지사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정 조직, 인력,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이호·김소연·조철민·손정혁 2022, 37).
- 경기도 전 부서와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책임감 있게 수립되고, 이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이런 관점에서 참여자들은 기본계획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중심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되며, ‘경기도와 센터,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행성과 평가 역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위주’로 한정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참여자들의 이런 의견은 그동안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 추진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사업 수행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 대부분 센터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임.
- 참여자들은 향후 첫째,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둘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넘어 ‘광역-기초 역할 분담에 기반을 둔 협력(지원) 구조 구축’과 ‘기초 센터 역량 강화 및 안정화 지원’ 사업 활성화, 셋째, 경기도정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주류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정책 추진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원센터가 공익활동하는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개발한 의제가 시민사회에서 구현되도록 환경, 생태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느낌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강화되고, 전문화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 평가 4: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 현재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좀 더 긴 호흡으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과 이행과제 평가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업 주기가 짧아서 사업성과를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평가지표가 분명치 않으므로, ‘장·단기 차원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함.
-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성과 평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1기의 목표가 평가되고, 2기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가 설정된 후 각 기수의 비전, 목표가 세워지는 것을 제안.”

“의회가 1년마다 있고, 예산이 1년마다 채워지다 보니까 (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 기간이 너무 짧고 (...).

“1~2기 공통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 사업의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표 등이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듯.”

3) 1·2기 기본계획 이행 주요 과제 및 사업 평가

가. 총평

- 참여자들의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사전 의견 조사 시행 후, 워크숍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1·2기 기본계획에서 이행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과 이행이 미진하여 3기 기본계획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함.
- 1기 기본계획은 ‘공익활동 지원의 전반적 토대 마련 및 공감대 확산’이라는 초기 단계의 목표에 맞게 ‘시민사회를 하나의 테두리 안으로 모아보는 시발점’이 되었음.
- 2기 기본계획은 1기에 비해 전략이 ‘구체화’하고, 사업의 양이 ‘ 많아지고’, 그 결과 ‘실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 논의결과, 참여자들의 활동 지역과 분야, 세대와 활동 방식의 차이에 따라 평가의 관점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의 영향력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과정에 지역, 세대, 분야 등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들이 1·2기 기본계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을 이행과제와 전략에 따라 종합한 결과는 <표 IV-2>, <표 IV-3>와 같음.
 - 목표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공익활동 현장에서 성취도가 높고, 만족도와 효능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이행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보완해주며, 종합적으로 1·2기 기본계획을 돌아보고 3기 기본계획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지표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함.

<표 IV-2> 1기 기본계획에서 성취도가 높거나 만족도가 높았던 이행과제 및 사업

사업	주요과제	전략
·경기시민사회 온라인자료관 ·공익활동 정보 아카이브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①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지역순회간담회	지역순회간담회	②사회문제해결·민관협치
·시·군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및 지역순회간담회	지역순회간담회	
·공익활동가 교류 활성화 ·공익활동가 한마당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미래세대 공익활동지원(청소년·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지원	③공익생태계 역량강화
·비영리단체 맞춤형 회계교육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화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경기도공익센터 및 기초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	④공익활동 기반강화

<표 IV-3> 2기 기본계획에서 성취도가 높거나 만족도가 높았던 이행과제 및 사업

사업	주요과제	전략
·공익활동가학교(새싹/전문가과정)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공	①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사업 확대
	-	②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존중과 인정방안 마련
	-	③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경제적 기반조성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	사회문제 해결형 경기도민 공론장 활성화	④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 체계구축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⑤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온라인자료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운영	⑥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
	-	⑦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기초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경기도-시·군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⑧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나. 세부 평가 내용

○ 평가 1: 사업 성취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이행과제와 사업

- 워크숍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던 이행과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 중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기초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가장 성취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함.
-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략을 설정, 광역센터는 북부지부를 개소하고, 2025년 현재 6개의 기초 지역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활동가들은 이들 사업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기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음.
- 또한, 열악한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지역순회간담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꼽혔음.
- 그밖에 1기의 공익생태계 역량 강화 전략과 2기의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사업 확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된 과제 및 사업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지역 순회 간담회 시도했던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경기도, 센터가 함께 협업해서 만든 사업인데, 청년들에게 지역의 시민단체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 1년 정도 활동하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한 사업이 있었어요. 지속성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지금도 아직 그 사업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활동가들의 모임들을 연결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센터에서 하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나, 교육 사업, 활동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활동을 연결하고,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는 트리거 역할로써 굉장히 활용을 잘했습니다.”

“공익의제 발굴 사업이 좋았습니다. 지역별로 모여서 논의하게 하고,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제로 합의를 보고,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실제로 그걸 해내기도 했구요. (...) 그 사업이 올해 또 연장이 돼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사업을 한 번 더 시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과정이 참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평가 2: 사업 성취도와 만족도가 낮았던 이행과제와 사업

- 1기 기본계획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익활동에 관한 인식 확산과 그에 따른 인정문화가 전략이나 과제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됨.
- 워크숍에서 많은 참여자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언급함.
- 또한, 다수의 활동가가 2기 기본계획에서 추가된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사업이 미흡했다고 평가함.
- 특히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사업은 정책 연구가 부진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외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향후 정책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정량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이행과제의 경우 기존 교류가 있는 단체 및 활동가와 달리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활동가들, 특히 청년세대의 활동가들이 결합하기에는 마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낮았음.
- ‘공익활동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처럼 중요한 사업이었지만,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이나 정책 연계로 이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영향력 차원의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거 같고, 정책적 변화도 거의 없었다’라는 평가가 제기되었음,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므로 향후 실질화 노력이 필요함.
- 그밖에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이행과제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3기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함.

“예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홍보가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익활동의 개념적인 부분, 아니면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은 젊은 활동가 양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공익활동단체의 활동가는 박봉에 일은 많은 곳으로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좀 실질화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역을 굉장히 많이 참여시켜야 하는데, 현장이랑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2기에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이란 전략이 있는데, 그걸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 참여자들이 1·2기 기본계획에서 이행 정도, 성취도, 만족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을 이행과제와 전략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표 IV-4>, <표 IV-5>와 같음.

<표 IV-4> 1기 기본계획에서 성취도가 미흡하거나 만족도가 낮았던 이행과제 및 사업

사업	주요과제	전략
·공익활동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	공익활동 발전 연구	①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시·군 공익활동 촉진 장려	②사회문제해결·민관협치
	-	③공익생태계 역량강화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④공익활동 기반강화

<표 IV-5> 2기 기본계획에서 성취도가 미흡하거나 만족도가 낮았던 이행 과제 및 사업

사업	주요과제	전략
	-	①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	②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존중과 인정방안 마련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③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경제적 기반조성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사업	
	-	④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 체계구축

	-	⑤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 개최	⑥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
	-	⑦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경기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⑧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4) 1·2기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에 기초한 담론화 논의

- 연구진은 기초조사를 넘어 해석과 담론화를 지향하는 연구 방향에 따라 1기와 2기의 기본계획 이행 성과 평가를 통해 제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섯 가지 담론을 제시, 워크숍의 주제로 설정하고 논의하였음.

담론1. “제1기 시·군 지역 연결, 제2기 다양한 지원사업 시도에 중점을 두면서 활동가와 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지원사업 체계는 구축됐다.”

- 참여자들은 지원사업의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평가에 관해 대체로 동의함.
- 그러나 많은 참가자가 한계에 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의 대상과 사업 포괄 범위, 센터 중심의 지원사업에 관한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초지자체 간 격차가 크고 광역-기초 간 연계나 활동가 지원체계’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미흡’하므로, 앞으로 ‘도민 참여 확산과 현장 중심의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둘째, ‘도민 누구나 공익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확산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지원’이 여전히 절실하다는 점, 셋째, 지원사업의 체계 구축 평가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 첫 번째 담론화 논의를 통해 활동가들이 지원정책을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제도개선 등 다층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 또 활동가가 지원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원사업의 체계 구축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가는데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도 있어요. 경기도 차원의 계획이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걸 도와주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들을 지속하거나 심화하거나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넥스트 전략은 부재했다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인 지원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정책적 안정성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경제적 가치 인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활동가, 단체 중심으로 간 것에 동의가 되고요. 근데 사업이 센터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얘기하고 싶어요.”

답론2. “제1·2기 기본계획상 과제 중 이행이 진전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행이 미흡하거나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과제도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두 번째 담론화 논의는 이행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중심 논제로 삼아 진행함.
- 참여자들은 전략적 접근의 내용으로 경기도와의 수평적인 협력 체계 구축,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결과에 대한 공유와 확산,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인정을 강조하였음.

“(...) 어떤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전략적 과제인데, (...) 바운더리를 어떻게 설정할지 자체를 같이 모여서 만드는 게 전략적 부분인데, (...) 그런 자리는 없이 공모사업 걸고 여기서 신청하세요, 이러는 거는 대단히 우리를 수동적 자세로 위치를 지울 수밖에 없고.”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그 운동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3기 기본계획의 이행과제와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 의한 활동의 결과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 더 많이 확인되고, 확산되고, 공유돼서, 효능감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활동하는 사람도 자긍심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나도 저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실질적인 경험과 생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이익집단주의로 비취질 경향이 있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 개별단체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국민들이 공익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바라보는 시각 교정,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전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론3.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에 있어 경기도가 지니는 위상을 비추어 볼 때 향후 고도화되고 선도적인 정책 방향이 요청된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폐지되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이 폐쇄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되어 경기도는 2019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설치,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두 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음.
- 또한, 광역 차원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6개의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 참여자들은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및 제도 중 특히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현황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음. ‘대구도 광역에 센터가 있지만, 경기도처럼 광역센터가 있고, 시·군 기초 센터가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은 경기도밖에 없’는 현황을 통해 경기도가 어떤 광역시도보다도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그 밖에도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처럼 ‘독보적’인 전략이나 이행과제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정책적 위상이 높다고 평가함.
- 그러나 경기도가 조례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센터 운영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풀뿌리 현장에서 볼 때 체감되는 바가 낮아, 고도화나 선도적인 정책 방향을 지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됨.

- 제도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공익활동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많은 참여자가 공감함.

“고도화, 선진화 얘기하는 게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주로 제도와 시스템과 조례를 위에서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떠오르지 않아요.”

- 한편, 선도와 고도화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애매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음.
- 경기도의 제도화 수준에 못 미치는 지역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생태계의 열악한 현실에 주목했을 때 고도화와 선도적이라는 의미는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전국 시민사회 정책을 이끈다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현실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됨.
- 이에 연구진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그 내용을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하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고도화와 선도의 정책 방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부연 설명함.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3기째 수립하는 유일한 광역단체라는 면에서 ‘기존에 하던 거를 답습하고 반복하는 걸 넘어서는’ 방향, ‘1·2기에서 진행된 사업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밀화하여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두 차례의 기본계획을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과제에 도전’하는 방향, ‘경기도가 이루어 놓은 성과 또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 목표들이 다른 권역,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또는 센터, 아니면 시민이나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전파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 등이 연구진이 제시한 내용이었음.
- 이런 측면에서 고도화, 선도는 제도의 성과를 넘어 풀뿌리 생태계의 실질적인 변화, 경기도공익활동 지원센터의 활동을 넘어 공익활동 주체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고도화, 선도는 이런 방향들은 조금 무게를 낮추거나 줄여도 되지 않을까? 저게 나오면 또 1기의 전략처럼 광의의 넓은... 이런 게 막 던져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참여자들은 1기와 2기의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시민사회를 튼튼히 하는 것, 지역적으로 고른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정책을 고도화하고 선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이르렀음.

답론4. “현재 관련 정책의 추진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편중돼 있는데, 이후 다양한 민·관 영역 간,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에 기반한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 활동지역에 기초 센터가 없어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이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체로 ‘기초 센터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정책 추진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편중’되어 있고, ‘광역과 기초에 공익활동 네트워크가 미흡’, ‘광역센터

와의 협력이나 기초 센터 간의 연계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수렴됨.

-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전체적으로 기초 센터 역량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및 광역-기초 역할 분담에 기반한 협력(지원) 구조 구축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음.
- 더불어 광역과 기초 센터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현재는 '서로 보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진단에서 광역센터에서 현재 '센터가 없는 기초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기초 센터 간의 연결고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안임.
- 또한, '현재 센터 내 활동가 간의 협력과 지원만으로는 공익활동 활성화의 큰 성과를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익활동 단체 혹은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역과 기초 센터의 지원,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는 시민사회 주체적 관점에서 센터의 역할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통분모와 협력방안'을 찾거나, 정보 공유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함.
- 한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지역 시민사회조직의 공익활동 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공익활동지원 센터 자체를 강화하는 데 머물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 이런 의견은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열악한 공익활동 현장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답론5. “경기도 광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넘어 31개 시·군 기초 단위에서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활성화로 주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워크숍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은 의제였으며, 공감 수준이 매우 높아 필요성과 의미에 관한 견해보다는 실현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오고 갔으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안이 제시되었음.
- 현재 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중간지원조직이며,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음.

“권역별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했으면 좋겠어요.”

“경기 북부 의제발굴사업을 하면서 북부만 해도 너무 넓고 환경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북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어요.”

“앞으로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를 15개를 더 만들어야 해요. (...) 지역에 민간중심으로라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

- 경기도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시 '권역으로 분화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안됨.
- 즉, “경기도는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되게 크고, 시·군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의 위원회로 시·군·

구까지 커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을 거”라는 진단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도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남부권역, 중서부권역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경기도 전역에 제도와 시스템이 고루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러나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31개 시·군 기초 단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 차원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주요한 인프라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기초 지역에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취지임.
- 아울러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음.

“센터가 없더라도 시·군에서 센터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공무원 아니고, 활동가들을 배치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의 인프라가 있으므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자기 동네를 기반으로 하면 센터와 연결이 훨씬 더 잘될 수도 있는 거고, (...)”

“우선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 조례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조례를 재개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기초자치체 간에도 공익활동에 관한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울 때, 권역별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준별이라고 해야 하나? 맞춤형 계획도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3. 주제별 주요 논의 결과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환경 진단

- 3기 기본계획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적 환경을 진단하는 논의를 진행함.
 - 워크숍에서는 조례에서부터 행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민·민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차원에서 중요한 환경 요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1) 제도적 기반

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환경에서 핵심적 요소: 제도

-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회 정책이 법률과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윤석열 정부의 경험처럼 시민사회 정책은 정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적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중요하다는 참석자 모두의 공감이었음.

“정책환경의 핵심은 제도일 것이다. 법과 조례의 문구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위법령 개선(제정 등)에 앞서 지역 조례가 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할 때 적극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

“정책적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집권 세력이나 사업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나. 제도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활용, 불합리한 지침과 관행의 개선도 중요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을 고안하거나, ‘조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참여자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의 관점과 시야에서 기존의 조례를 해석하는 것, 정책의 걸림돌에 되는 지침이나, 관행의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기존 조례 가운데 ‘경기도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민주시민교육 및 역량 강화’, ‘기부문화 활성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주제 또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존 조례 설치 목적과 내용에서 연결 가능성을 찾기 위한 조례 모니터링과 분석이 3기 계획 수립 과정에 포함될 필요 있음.”

“경기도 내에서 각종 공모사업 형태로 일어나는 그 단위의 사업만이라도 현실적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운영 지침이 점검되거나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부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단순화시켜주는 게 (...)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2)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익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방안 마련의 중요성

- 워크숍과 사전 답변지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개진한 의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에 관한 것이었음.
- 이미 2기 기본계획의 8대 전략 중 하나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방안 마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광명시에서 관련 연구와 포럼 등이 진행되었을 뿐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나. 공익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꾸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단기간에 공익활동에 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식이란 것이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간과할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에 대한 가치 확산과 인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졌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꾸준히 인식 개선과 교육’을 하는 장애인 운동처럼 시민사회의 가치와 공익활동의 의의에 관해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설명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

- 사회적 인정 방향으로서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공익활동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이 제시되었으며, 공익활동가의 날, 포상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받으니까 직업을 선택 안 하는 거고, 지금 상태로는 활동가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니까. (...) 사회적 인정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계속 없어서 저는 3기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인정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시민사회의 활동이 만들어내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공감대를 이루는 것, (...)”

“공익활동 단체의 독립성 보장과 청년 활동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공익활동 잘하면 상 줬으면 좋겠어요.”

다.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재는 소극적이며 차별적인 시민사회 관련 정책으로 연결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재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제외되는 것임.
-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들 수 있음. 시민사회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경험을 한 바 있음.
- 워크숍 참여자들은 이런 차별적 지원정책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힘을 쏟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이러한 문제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청년들을 채용하면 지원금 주는 것 있잖아요? (...) 어느 순간 그게 싹 빠졌어요.”

“청년 일자리 지원할 때, 비영리 코드 하나만 넣으면 가능하대요. 경기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비영리 코드 하나를 넣으면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 좋겠어요.”

3) 행정의 인식 변화와 수평적 관계 형성

가. 행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중요성

- 참여자들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이 행정 영역에서도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 행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함.
- 공익활동 현장에서 행정의 태도는 시민사회 정책뿐 아니라, 민관 협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경기도는 협치 정책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민과 관의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와 행정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함.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환경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시민사회를 새마을, 독점단체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험만 있고, (...) 주체적 시민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 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나 거버넌스, 시민사회 활성화는 그냥 아는 사람들, 우리끼리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시민사회의 공익적 의제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게 민관학의 협의(거버넌스)가 구조화되고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관이 하는 역할과 민이 하는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협력 파트너 관계에 대한 마인드가 서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례화하는 장치들이 제도화되거나 강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 변화 방향

- 행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 형성에서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개진되었음.
- 실현방안으로는 시민사회 정책에 권한이 있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과 의회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경기도 및 시·군의 공공 의제에 관해 시민사회와 정례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제안함.
- 직접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행정은 시민사회를 공모사업 신청 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로만 인식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절박성이 묻어나는 다수의 의견이 개진됨.
- 그밖에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정치와 행정을 넘어 교육과 사법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행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지지 확보가 근본적인 대안이며, 시민사회가 ‘협력적 대항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공무원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전혀 인식이 없는 시장인 경우에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선출되신 분들의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공무원들하고의 거버넌스도 중요한데, 그걸 감시하고 지적하는 의원들하고의 소통들도 중요해요. (...) 의원들이 협조적인 상황이 되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일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4) 시민사회 내부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가. 민·민협력의 중요성

- 조례와 기본계획과 같은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 단위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정, 민관의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이어 민·민협력

도 매우 중요한 환경 요소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시됨.

“민·민 간 협력 강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여성연대는 15년 유지되고 있어요. 여성단체협의회부터 자주여성연대까지 회원단체로 있는 조직입니다. (...) 의회에서도 오고, 행정부에서도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애 쓰거든요. 분야도 다르고 활동 방향도 다르지만, 지역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백 그라운드가 돼주고 있습니다. (...) 지역 안에서 민·민 간 네트워크 강화도 시민사회가 활동하는 데 중요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민·민협력 강화 방안

-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의 소통과 연결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시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만나서 공유하는데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모이기 힘들다. 각자의 활동이 늘 바빠 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플랫폼이 사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면(마치 페이스북처럼) 만나지 않아도 공유와 협력을 만들 수 있겠다 싶다.”

“시민단체는 그 정체성을 알리고 싶어 하는 공급자고, 공익활동을 듣고자 하거나 체험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시민일 수 있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누구나 검색하면 바로 떠서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단체가 알아서 풀기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플랫폼, 다양한 단체들의 공익적인 의제가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공익활동에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말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공론장과 의견을 제시한 실현의 경험들이 정책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는 게 없다면 무슨 이유로 공익활동을 하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 하겠는가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보장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대이다.”

5)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촉진자 역할 강화

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

- 참여자들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환경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음.
- 현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광역센터의 지위에서 ‘경기도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채널 기반’과 연구·조사 기반 강화, 중간지원조직 설립 촉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 및 의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시민 공익활동을 대변’하는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임.
- 공익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이 공익활동 생태계 구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그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 민·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 나아가 민·민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지역 기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이긴 하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강화가 있어야 함. 이를 기반으로 시·군 내 다양한 협의체 또는 단체, 연대 구조 등과의 협력 사업 발굴도 필요함.”

“경기도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느슨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이래저래 모아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여 생태계가 이루어질지 의심이다. 생태계는 다양한 동식물이 풍부하게 살아가는 곳이다. 풍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거나 한다면 시민사회는 오그라들지도 모른다.”

6)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적 인식

가. 지원정책의 의미

-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시민사회의 ‘사회 공헌’,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함.
-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공익활동이 증진되기 위한 환경 요소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시민 활동이 활발해졌으나, 예전의 가치 중심 활동에서 활동자원에 대한 지원 욕구와 의존도가 높’은, 즉 시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대중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함.
- 연구진은 워크숍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범주를 시민사회 본원적 부문에 관한 ‘주체 지원’과 넓은 의미로서 시민사회 전반의 ‘생태계 조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나, 참여자들은 주로 주체 지원을 주제로 논의하는 경향을 보임.

“현재 추진체계(예산 포함)에서 주체 지원은 상상되기 어렵거나 협소할 수밖에 없다.”

“활동가들은 보조사업 중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고충을 많이 토로함. 활동의 영역 중 사람에 관한 지원이 가장 어렵지만,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음.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은 활동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시민사회가 위축된 환경에서 가장 시급한 현실적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대안 필요.”

나. 지원정책 프레임의 문제

- 참여자들은 시민사회조직이나 공익활동 단체를 수혜자로 설정하는 현재 지원정책 프레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지원의 개념을 여기 계획안에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이라고 네이밍이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시혜적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감당하거나, 또는 그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을 찾거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이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행정 추진체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요. (...)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그걸 지지할 근거로서 이 정책 사업들을 실행할 때, 실행의 파트너가 가장 최전선에 누구냐면, 현장에 있는 이 단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 구조여야 되는데, 여기에 네이밍이 지원이라고 되는 순간, 어떤 열악성을 담보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단체가 특정 의제를 해결하는데 행정이 지원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활동에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 지원이 시민단체의 목줄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분명한 정책환경이 필요하다. 숨 막히는 정산과 규정에서 좀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용감해지길 바란다.”

다. 지원정책 방식의 개선

-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
- 경기도의 산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사업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하에 숙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의 참여자가 공감하였음.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확대할 거냐? 대화, 간담회를 통해 지원의 범위와 지원의 규모, 지원의 방식, 그리고 지원의 대상을 어떻게 더 넓히고, 그리고 인큐베이팅 하는 것과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일방적 시혜적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

라. 시민사회 자립화 전략의 필요성

- 한편, 정부의 지원이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음.
- 참여자들은 특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 ‘적절함’과 ‘균형’의 필요성과 시민사회 내부의 논의를 강조함.

“공익활동 활동가, 단체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익활동가, 단체에 대한 지원이 활동가, 단체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사회 주체 지원은 시민단체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 같을 수 있다. 재정의 문제 심각하다. 지난 정부에서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모두 제거한 것은 시민사회가 가지는 정치적 힘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친 지원은 자발성과 혁신성을 훼손할 수 있다.”

“물론 걱정 부분도 있다. 공익활동 단체가 관(정부, 의회)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견제하는 관계에 있기에 공

익활동 단체가 관의 지원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익활동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익활동 단체의 견제 기능이 상실되지 않게 하는 절묘한 정책 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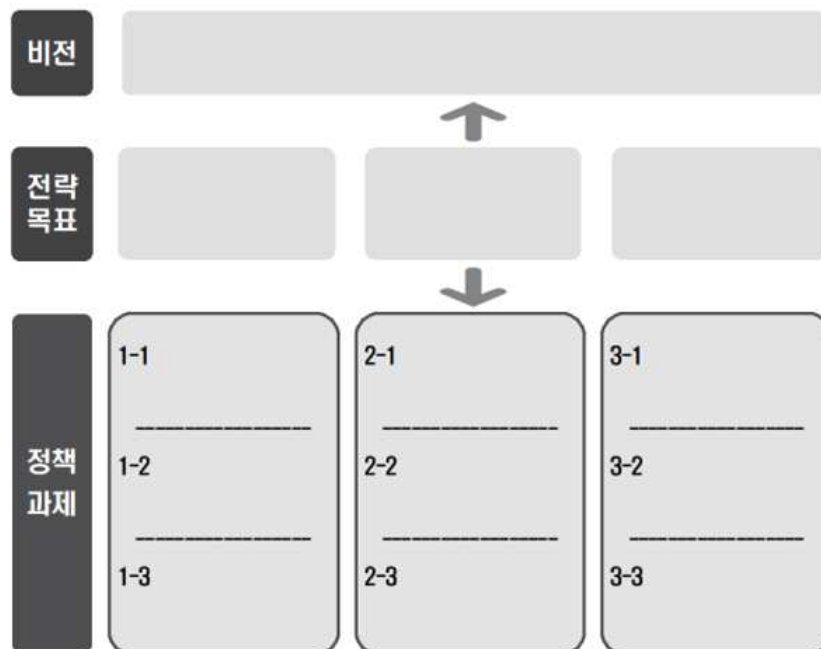
4. 주제별 주요 논의결과 [3]: 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설계

1) 설계

○ 3차·4차 워크숍은 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안)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비전은 3기 기본계획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람(people), 방법(practice), 목적(purpose)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함.
- 전략목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년 동안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결과물로 비전과 전략과제의 연계, 구체성·측정 가능성·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함.
- 전략과제는 설정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이나 활동으로 1기와 2기의 기본계획 전략과제 중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1·2기 기본계획 이행과제 평가 및 정책환경분석을 통해 새롭게 도전해야 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선정함.

○ <그림 IV-1>과 같은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라 논의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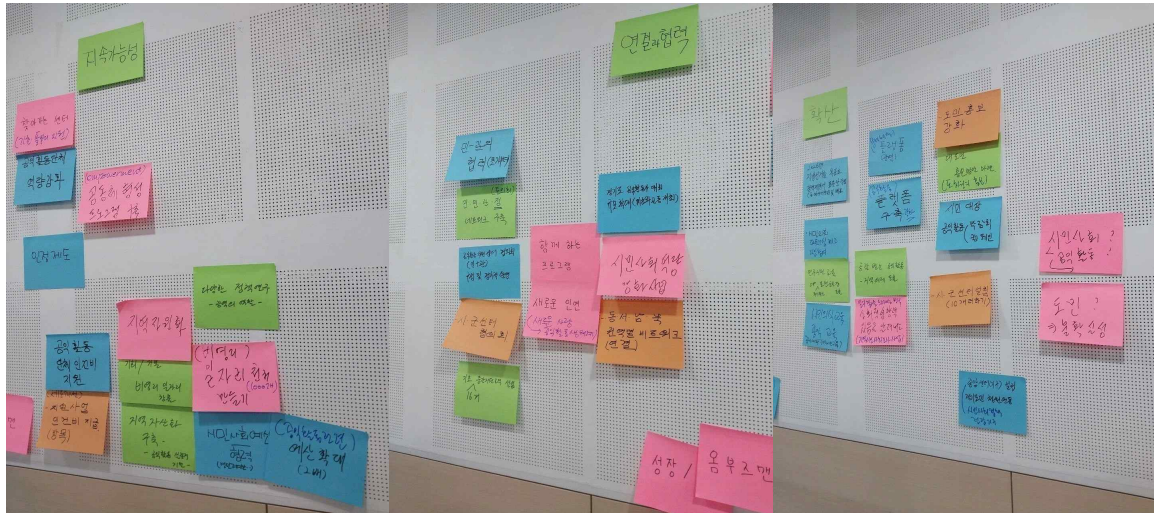


[그림 IV-1] 비전 체계도

2) 비전

○ 비전(안)을 만들기 위해 참여자들은 일차 작업으로 비전에 반영해야 할 키워드를 도출함.

- 키워드는 목표, 방향, 가치를 비롯하여 과제, 사업 등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참여자가 과제 및 사업과 관련한 키워드를 제시함.



[그림 IV-2] 참여자들이 제시한 비전 체계도 핵심 키워드 목록

○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크게 지속가능성, 연결과 협력, 확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전략목표로 제안하기로 함.

<표 IV-6> 참여자들이 제시한 비전 체계도 핵심 키워드 목록 정렬 작업 결과

주요 키워드	기조와 방향	전략목표
• 찾아가는 센터(풀뿌리 지원) • 공익활동단체 역량 강화 • 시민사회 역량강화사업 •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구축 • 공익활동 인건비 지원 제도개선 • 지역 자원화 • 지역 자산화 구축(실질적 지원) • 비영리일자리 안정화 • 시민사회예산(능성인지 예산) • 공익활동 지원예산 확대 • 옴부즈맨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자립,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지속할 수 있는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성
• 민간협력 • 민·민, 민·관, 민·정(의회) 네트워크 • 공익활동 지원센터협의회(민관) 구성 및 정기적 운영 • 시·군센터협의회 • 시·군센터 10개 설립 • 기초 중간지원조직 설립 • 활동가 교류 프로그램	• 시민사회조직, 행정, 기업 간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 31개 시·군과의 연결과 연대	연결과 협력

• 새로운 사람, 인연 유입 →공익활동 생태계 • 공익활동가대회 확대(기초) • 동서남북 권역별 네트워크		
• 시민사회·공익활동 개념 알리기 • 민주시민 교육 • 시민교육의 장, 공익대학 • 도민 공론장 •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 도민 홍보 강화 • 공익활동 박람회, 캠페인 • 시민의회(시민참여, 파트너십 제고) • 2026년 지방선거 시기 정책제안서 표준안 마련 • 공익활동 인정제도	• 공익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 시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 사회적 인정	확산

○ 연구진은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6개의 비전(안) 제안

“모두의 시민사회, 변화의 공익활동, 더 나은 경기”
 “연결과 협력의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경기도, 지속할 수 있는 공익활동”
 “연결의 힘, 협력의 기반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공익 경기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할 수 있는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연결과 협력으로 성장하고 확산하는 경기도의 선도적 공익활동”
 “더 촘촘한 연결, 더 튼튼한 협력, 더 동등한 파트너십, 더 많은 공익활동, 더 좋은 경기”

○ 4차 워크숍에서 2개의 비전(안) 도출

(1안) 모두의 공익활동, 힘이 되는 시민사회, 활기찬 경기
 (2안) 모두의 공익활동, 연결하는 시민사회, 변화하는 경기

3) 전략목표와 과제

가.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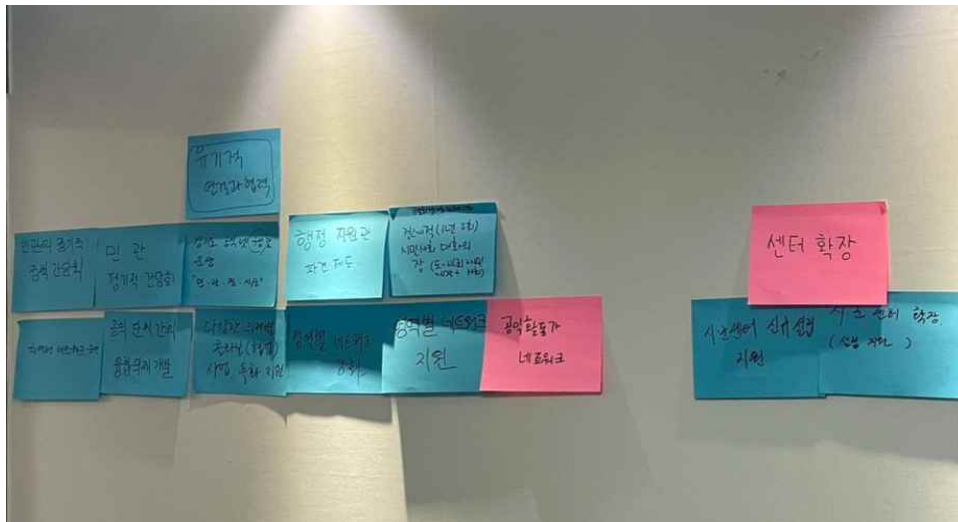
- 연구진은 3차 워크숍을 거친 후, 전략목표를 1. 지속가능한 지원, 2. 유기적 연결과 협력, 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으로 정식화함.
- 지속가능한 지원은 경기도의 담당 부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실질화와 확대를 통한 지원정책의 효능감 제고를 목표로 함.
-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은 민-관, 민-민, 도-시·군의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의 연결과 협력에 기반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함.
-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의 저변확대와 공익활동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지지 확보를 목표로 함.

<표 IV-7> 제3기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목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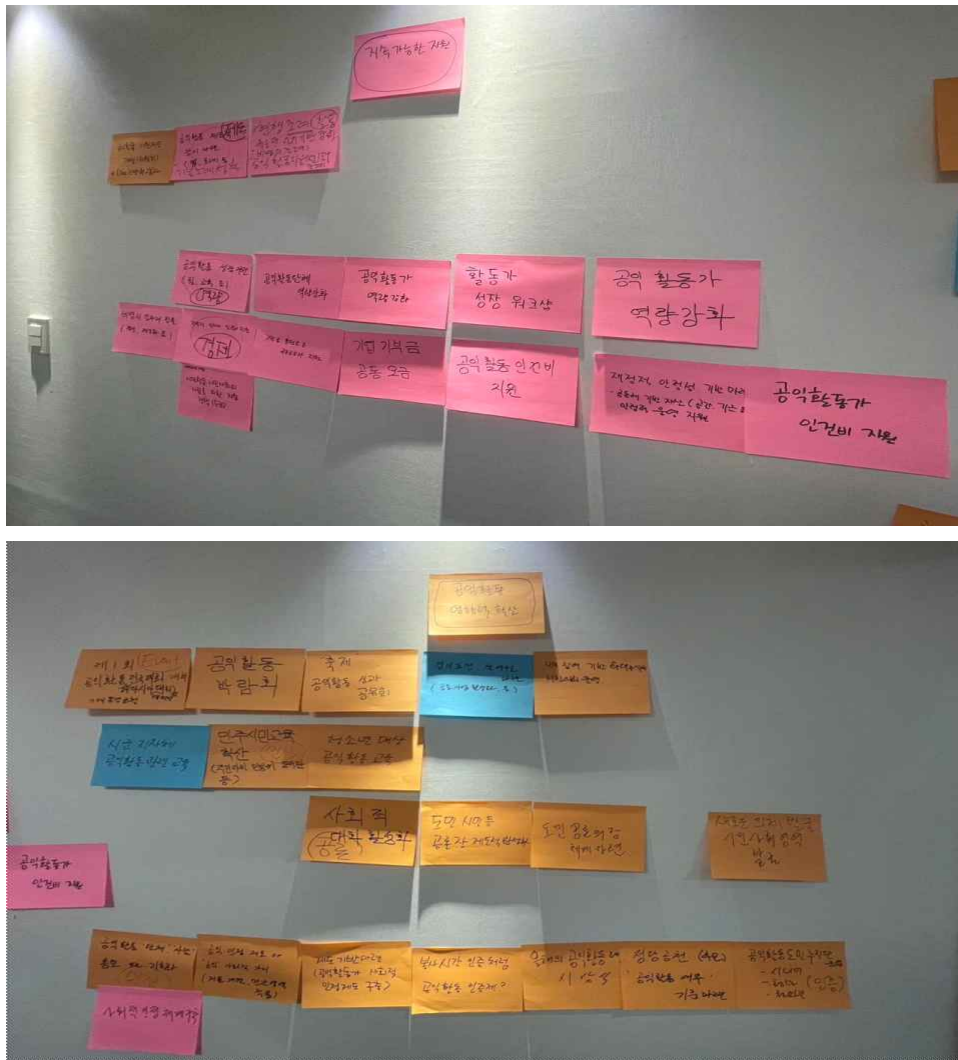
비전	(1안) 모두의 공익활동, 힘이 되는 시민사회, 활기찬 경기 (2안) 모두의 공익활동, 연결하는 시민사회, 변화하는 경기		
전략목표	1. 지속가능한 지원	2. 유기적 연결과 협력	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전략과제	1-1	2-1	3-1
	1-2	2-2	3-2
	1-3	2-3	3-3

나. 전략과제 및 사업

- 전략과제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목표와의 연계성, 경기도의 1기·2기 기본계획상 전략과제의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변화된 지형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규 과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 전략 체계(2025~2030)와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되, 전략과제와 사업을 구분하여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를 진행함.
- 참여자들이 제안한 전략과제 및 사업은 이후 연구진이 세 가지 전략목표에 따라 정렬하여 분류하고, 정책과제로 정식화하였음.



[그림 IV-3] 참여자들이 제시한 제3기 전략과제 및 사업 목록 (계속)



[그림 IV-3] 참여자들이 제시한 제3기 전략과제 및 사업 목록

<표 IV-8> 참여자들이 제시한 제3기 전략과제 및 사업 목록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사업
지속가능한 지원	- 공익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 의제 관련 진단보고분과 설치 - 현행 조례 활용,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제도적 기반 강화 (비영리일자리 조례, 공익활동지원센터 조례 등) - 공익활동 성장지원(교육, 워크숍 등), 공익활동 단체·활동가 역량 강화 - 안식년 제도가 없는 소규모 단체 공익활동가 대상 힐링 호텔 - 비영리일자리 창출 및 지원: 청년 대상 비영리일자리 창출 및 제도화, 지속할 수 있는 비영리일자리 방안, 좋은 일자리 단체 인센티브 제도 - 공익활동 인건비 지원 - 기부금, 후원금 등 공동모금과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 시민사회조직의 재정 안정성 기반 마련 - 공동체 기반 자산 (공간, 기금 등) 안정적 운영지원, 공간 설치 지원사업 - 시민 활동 및 시민사회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활성화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신규사업 지원: 시설비 지원 혹은 마을공동체 분야 등에서 추진했던 지원관 제도 등을 통한 설립 촉진, 기초 센터가 없는 지역 대상 권역센터 추진 1인 공익활동가 지원: 1인 활동가가 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단체 선택,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와 같은 비영리 부문 지원

유기적 연결과 협력	• 민관, 민관정의 정기적 정책 간담회, 연례회, 대화의 장(도지사, 시·군 자치단체장) 마련 • 경기도 공익넷 구성 및 운영 • 시·군에 행정지원관 파견제도를 통한 시·군과 경기도 연결 • 권역별/영역별 네트워크 강화,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공익단체 간의 융합 의제 개발, 다양한 의제별 콜라보 (협업) 사업 특화지원 • 1년마다 지역 선정, 지역순회 공익활동 페스티벌 사업을 통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 1단체×1기업 사업, 공익활동단체와 기업이 만나는 장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 공익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공익활동 전국대회 경기도 개최, 아시아태평양대회, 대통령 초청 등 대규모 공익활동 축제, 행사, 공익활동 성과 공유회 등 • 경기도민 참여구조 마련 (공모사업 활성화 등) • 민주시민교육·공익활동 교육 강화 :시·군 지자체 공익활동 교육 강화, 주민자치, 민방위, 도서관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확산, 청소년 대상 공익활동 교육 등 • 경기시민대학 • 공론 활성화: 도민 공론의장 체계 마련, 도민, 시민 등 공론장 제도 활성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제도 구축, 사회적 인정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무급 공익활동가의 공익활동 경력인정, 공익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민간영역 적용, 공익활동 '단체' '사람' 홍보 및 기록화, 올해의 공익활동대회 시상식, 공익활동 인증제 (봉사시간 인증) • 정당공천 (후보) '공익활동 여부' 기준 마련 • 공익활동도민추진단 운영 (시니어, 청년, 청소년) • 시민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시민의회 운영 • 새로운 공익활동 의제 발굴 • 시민사회/사회혁신 참여예산제

- 이 밖에도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도 개진되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기연구원 내 공익활동(시민사회) 연구실 설치, 경기도 차원에서 공익활동(시민사회) 연구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이 제안됨.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방안 중 하나로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인증제 시범사업, ‘안양공꿀’이 소개되었으며, 이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함.

※ 공익활동 인증제 ‘안양공꿀’ 사업 개요

- 추진목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활동의 경계가 모호하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부재로 활동 동기 유발이 어려웠다. 이에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제도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시행한다.
- 사업기간: 2025년 7월~12월
- 사업대상: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청년, 현 공익활동가
- 사업 내용
 - 인정 공익활동의 기준 마련:공익활동의 개념과 인증하는 활동 내용 구체화
 - 온라인 플랫폼(안양공꿀) 구축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시범사업 실시
 - 안양지역 내 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과의 공익활동 경력인정에 대한 협약 체결
 - 경력인정 실제 사례 발굴
 - 2025년 시범 실시 이후, 2026년 사업 고도화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공동사업 추진 제안

V. 제3기 기본계획(안)

V. 제3기 기본계획(안)

1. 기본계획 비전체계

1) 비전

가. 비전 설정의 방향

- 제1·2기 기본계획의 비전은 각각 공익활동의 토대가 되는 ‘생태계’ 구축에서, 더 많은 도민의 ‘참여’와 이를 통한 도정 방향인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자는 의지를 표현함.
 - 제1기 비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
 - 제2기 비전: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 제3기 비전은 제1·2기의 성과를 딛고 나아가는 발전된 단계를 함의하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에 있어 지니는 경기도의 위상을 고려해 진일보한 의미를 담고자 함.
- 아울러 중장기 계획 비전의 일반적인 구성요소(3P)로 간주되는 주체(People), 수단(Practice), 목적(Purpose)을 균형있게 고려함.

나. 제3기 기본계획 비전

- 제3기 기본계획 비전은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공동워크숍을 통한 논의와 중간보고회 자문의견 등을 종합해 설정함.
- 비전 구성의 3가지 요소인 주체, 수단, 목적에 있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수렴함.
 - 주체: 정책과 실천의 주체로서 ‘모두’를 호명. 공익활동,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특별한 사람, 일부 부서·기관이 아닌 도민 모두의 일임을 강조
 - 수단: 공익활동을 통해 함께 이룰 수 있는 성과이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사회’ 제시. 1안은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될 것이라는 효능을 강조. 2안은 발전된 시민사회의 모습으로서 연결을 강조
 - 목적: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표현. 근거 조례에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1안은 공익활동이 기여할 수 있는 발전의 부문으로서 활력을, 2안은 공익활동을 통한 변화를 강조
- 비전 수립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향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심의과정과 2026년 지방선거를 즈음한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비전은 다음 2가지 복수 안으로 제시함.
 - 1안: “모두의 공익활동, 힘이 되는 시민사회, 활기찬 경기”
 - 2안: “모두의 공익활동, 연결하는 시민사회, 변화하는 경기”

2) 전략목표

가. 전략목표 설정의 방향

○ 제1기 기본계획

- 제1기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지원”이라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①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②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치 ③ 공익생태계 역량강화 ④ 공익활동 기반강화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함.
- 이는 초창기 지원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결’, ‘확산’, ‘역량강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제2기 기본계획

- 제2기는 ①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②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③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추진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함.
- 이를 통해 2022년 조례개정을 통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확장된 정책의 지평을 반영해 공익활동 ‘주체’와 시민사회 ‘생태계’, 그리고 이를 다룰 ‘추진체계’를 분별함.

○ 제3기 기본계획 전략목표

- 제3기는 제1·2기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녹록지 않은 정책환경 속에서 좀 더 근본적인 의제들에 접근하고자 함.
- 아울러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에 주안점을 둠.

나. 제3기 기본계획 전략목표

○ 제3기 기본계획의 전략적 주안점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정책 담당부서가 주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그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달시켜 온 다양한 지원사업은 향후 지속사업으로 안정화하고 확대·개선해 나가도록 함.
- 그간 안착된 지원사업은 주로 공익활동 ‘주체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정화와 효율화를 통해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제도적 기반, 사회적 지지, 유관 영역과 주체 간 연결과 협력 등 ‘생태계 조성’ 부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을 시작해야 함.
- ‘생태계 조성’ 부문은 우리 사회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더디게 하고, 공익활동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의제임. 근본적 접근을 통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정책효과 도출을 위한 저변을 형성할 수 있음. 근거 조례에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중략)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 그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 지향은 지원정책의 ‘연결된 추진체계’와 공익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수렴할 수 있음.

○ 핵심적인 전략지향1: ‘연결된 추진체계’

- 제3기 기본계획 전략목표는 먼저 연결된 추진체계 형성이 중요함.
- 기존 지원정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역할이 편중된 상태로 진행돼 정책의 효과와 근본적 접근을 이루기에 한계를 나타냄.
- 이에 따라 센터와 담당부서,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유관 부서, 관내 기업과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계가 필요함.
- 아울러 도·시·군 간 역할분담도 중요함. 31개 시·군의 광범위한 지역의 정책수요를 도센터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함. 지역별 공익활동 주체들을 지근 거리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초 시·군단위에서 맡고, 광역 도 차원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핵심적인 전략지향2: ‘사회적 영향력’

-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시민사회·공익활동 지원정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정책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과업지시에도 시민사회·공익활동 지원정책의 홍보 강화방안 제시가 포함됨. 하지만 앞서 기본계획 이행성과평가에서 확인한 것처럼 홍보사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해 실행해 왔음.
- 물론 기본적인 홍보사업은 지속돼야 하지만, 홍보만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임. 좀 더 근본적으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종합하면 제3기 기본계획 전략목표는 ‘지원사업’ 지속과 더불어 ‘연결된 추진체계’와 ‘사회적 영향력’에 집중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 [전략목표1] 지속가능한 지원: 담당부서와 도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기본적인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확대·개선
- [전략목표2]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민-관, 민-민, 도·시·군의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의 연결과 협력에 기반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체계의 근본적 전환
- [전략목표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정책과정에 공익활동 주체(참여도민)의 목소리 수렴·반영 강화

3) 전략과제

가. 전략과제 제시의 방향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계획과의 연계

- 경기도 기본계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넘어서 민·관의 모든 유관영역과 주체를 포괄함.
- 그럼에도 지원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4년 수립한 전략계획과 제3기 기본계획과의 유기적 연관성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
- 센터 전략계획의 4가지 핵심목표 중 ‘생동하는 조직’을 제외한 3가지가 기본계획과 연관됨.

제3기 경기도 기본계획 전략목표

담당부서 지원사업과 센터 전략계획



[그림 V-1] 센터 전략계획(2025~2030)과 경기도 기본계획(2026~2028)의 연관

○ 기본계획 전략목표1: 지속가능한 지원

- 센터의 공익활동 주체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된 ‘공익활동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담당부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전략목표1과 연계됨.
- 그간 안정화된 지원사업은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와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조성’ 등 두 가지 과제로 수렴됨.
-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3기 특화과제로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마련’을 신설함.

○ 기본계획 전략목표2: 유기적 연결과 협력

- 센터 전략계획 핵심목표 ‘영역 간의 연대와 협력’은 기본계획 전략목표2와 연관됨.
- 기존 관련사업 중 안정화된 부분은 전략목표1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전략목표2에서는 영역적 연결(‘민·관, 관·관, 민·민 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적 연결(‘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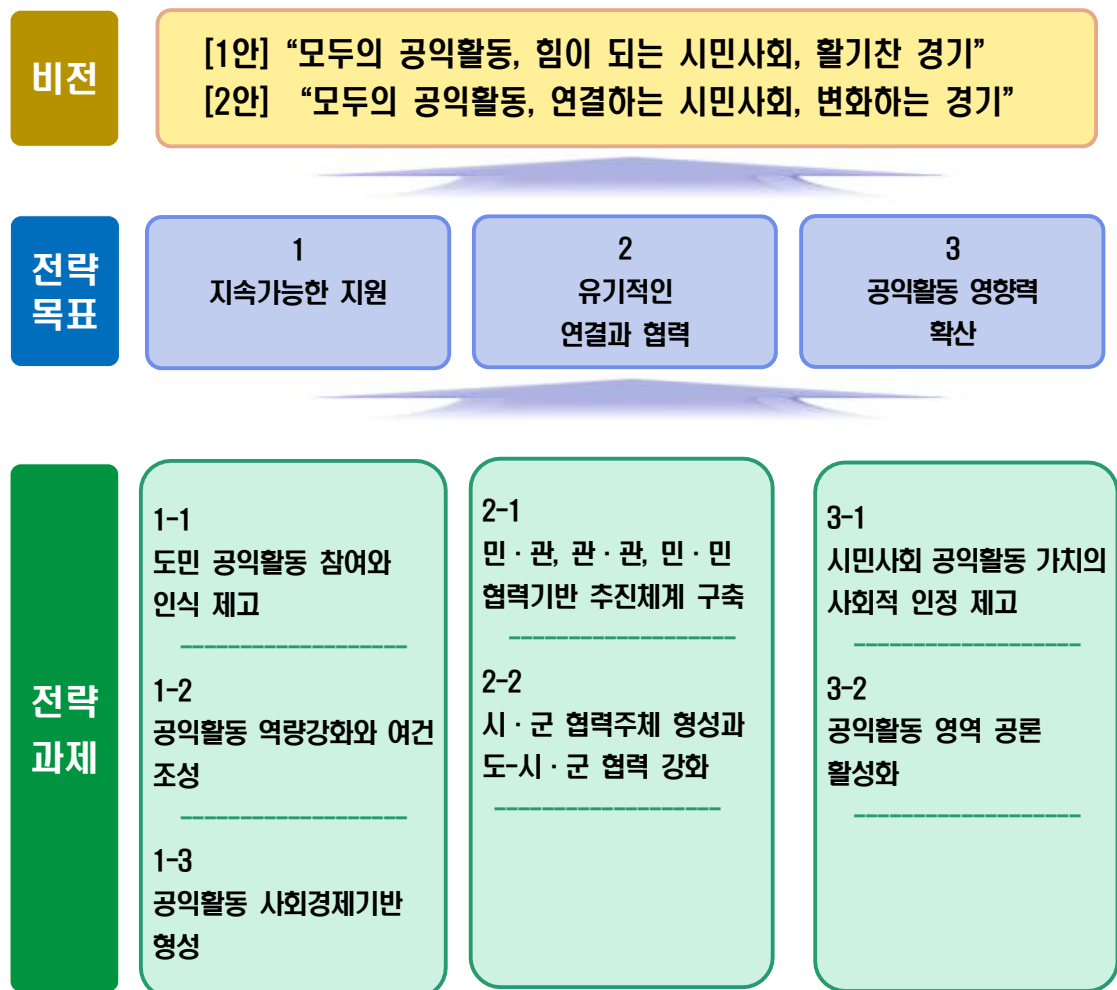
협력 강화') 과제를 강조함.

○ 기본계획 전략목표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 센터 전략계획 핵심목표인 '도민의 참여와 지지 확장'은 기본계획 전략목표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과 연관됨.
- 기존 관련사업 중 안정화된 부분은 전략목표1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전략목표3에서는 사회적 인정('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과 공론구조('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과제를 강조함.

나. 제3기 기본계획 전략과제

- 앞서 논의한 비전과 전략목표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3가지 전략목표에 걸친 7가지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그림 V-2] 제3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2. [전략과제 1-1]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1) 취지와 방향

- 공익활동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임.
- 제3기 기본계획 비전 역시 ‘모두의 공익활동’을 천명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기도를 지향함.
- 도센터와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 온 도민 공익활동 참여 확산과 공익활동을 복돋우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개선해 나가야 함.

2) 현황

가. 제1기 기본계획

-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와 관련해 ‘공익활동 기반강화’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공익활동 모임 결성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홍보’, ‘인큐베이팅’, ‘인프라’에 관한 사업들이 추진됨.
 - 홍보: 도센터와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뉴스레터·웹진, 홍보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 공익활동 기자단 운영 등
 - 인큐베이팅: 도센터와 시·군센터(구리)의 공익활동(일반·청년·청소년) 스타트업 지원
 - 인프라: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도/시·군센터 설치·운영, 도민 정보제공과 교류·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아카이브) 구축과 오프라인 공유공간 지원 등

나. 제2기 기본계획

- 제2기 기본계획에서는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와 관련해 8가지 전략에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과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 그리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를 포함함.
- 아울러 전략과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가 제시됨.
-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홍보’, ‘인큐베이팅’,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2023년 도센터의 사무공간 이전 과정에서 공유공간 지원사업이 중단되기도 함.
 - 홍보: 도센터와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뉴스레터·웹진, 홍보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 공익

활동 기자단 운영 등

- 인큐베이팅: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도센터), 시니어 공익활동지원(군포)
- 인프라: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도/시·군센터 설치·운영, 도민 정보제공과 교류·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아카이브) 구축과 오프라인 공유공간 지원 등

다. 도센터 전략계획 및 최근 동향

- 현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계획에는 전략목표인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와 관련해 4가지 추진과제와 관련된 핵심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음.
 -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발굴: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공익위키
 - 공익활동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제고: 공익페스타
 -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공간조성: 공익활동 거점공간(남부) 조성
 -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지식 제공: 시민기록자 양성, 아카이브(툇), 공익정보아카이브
- 최근 도센터의 중장년층 공익활동 입문 워크숍 ‘다르게 살아볼 결심’, 청년 ‘공익해봄’ 프로젝트, 수탁법인인 (사)경기시민연구소 올림의 공익활동 ‘청년워크숍’ 등 새로운 지원사업도 시도되고 있음.

3) 실행과제

가.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의 지속·확대 추진
- 기본적으로 도민을 만나고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은 시·군 단위에서 수행하고, 경기도는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북돋우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전략과제 2-2’ 관련)
-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경기도 차원의 도민 공익활동 참여 직접 지원사업 필요

나.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 도민의 공익활동을 북돋우는 기반을 조성하는 간접 지원사업의 지속·확대 추진
- 특히 도민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도모할 수 있는 공유공간 확충은 공익활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로 제3기 기본계획에서 전향적 접근 필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이전 과정에서 폐지된 공유공간을 다시 마련 필요
 - 공유공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공유공간 연계·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다.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실행과제들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외에도 도민들이 공익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 다양화 필요
 -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청년포털,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사회활동지원), 경기도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시민대학) 등에 일자리·사회활동 진로로서 공익활동 교육·지원과정 공동설치·운영
- 공익활동지원센터 외 공유공간 확충을 위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와 접목해 기존 공공·민간 공간 활용방안 모색
 - 예: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법인인 대구시민재단의 ‘공유대구’ 사업 수탁운영

공유대구¹⁹⁾

공유를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이 극대화되고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공공·민간의 유휴공간, 장비/물품, 재능의 제공주체와 사용주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4) 연차별 계획

가.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1년차(2026):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 2024년 수립된 센터 전략계획과 2025년 수립된 기본계획 간 결맞춤을 위한 사업편제 조정
- 2년차(2027):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 3년차(2028):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 제3기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평가

나.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 1년차(2026):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 2024년 수립된 센터 전략계획과 2025년 수립된 기본계획 간 결맞춤을 위한 사업편제 조정
- 2년차(2027):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 3년차(2028):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 제3기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평가

19) 공유대구 홈페이지(<https://www.sharedg.org>).

3. [전략과제 1-2]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조성

1) 취지와 방향

- 공익활동의 활성화 과제는 도민의 공익활동 진입(‘전략과제 1-1’ 관련)과 이미 진입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역량과 여건을 두 축으로 구성됨.
- 삶의 많은 시간을 투여하거나 직업적 전망에 기반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공익활동가와 이들이 결성한 공익활동단체는 많은 경우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요구의 해결에 있어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공익활동 주체들의 역량강화가 긴요한 과제로 제기됨.
- 그간 담당부서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착된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을 지속·확대하는 가운데, 지원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도 요청됨.

2) 현황

가. 제1기 기본계획

-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조성’과 관련해 4가지 전략 중 하나로 ‘공익생태계 역량강화’가 포함되고, 주요과제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 역량강화’를 제시함.
-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단체 활동지원’, ‘단체 운영지원’, ‘활동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단체 활동지원: [담당부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도센터] 코로나19 관련 공익활동지원사업(2020~2022) [시·군센터] 공익활동, 의제사업·모임 등(구리·군포·안성·평택)
 - 단체 운영지원: [도센터] 회계역량강화, 자문단/상담소 운영, 회계 프로그램 지원 [시·군센터] 회계 가이드북, 홍보지원, 회계·IT역량강화(군포), 상담소, 운영역량강화(성남), 단체 설립·성장·의제·캠페인 지원(평택)
 - 활동가 지원: [도센터]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공익활동가 교육·교육비 지원, 재충전 지원 [시·군센터] 활동가교육(구리·군포)

나. 제2기 기본계획

- 3가지 목표 중 하나로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설정하고, 전략으로 ‘시민사회 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제시함.
- 아울러 전략과제로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고’, ‘공익활동단체 운영 및 사업역량강화

지원'을 제시함.

-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단체 활동지원’, ‘단체 운영지원’, ‘활동가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단체 활동지원: [담당부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도센터] 공익의제발굴 지원사업(북부) [시·군센터] 공익활동지원사업(구리·안성·평택·광명·군포), 의제실험실(군포)
- 단체 운영지원: [도센터] 공익활동 상담소, 비영리 회계 프로그램 지원(~2023) [시·군센터] 상담소(광명·군포·성남), 비영리IT가이드북, 홍보지원, 조직역량강화(군포), 공익활동단체 설립·성장지원(평택), 단체CI제작 지원(광명)
- 활동가 지원: [도센터] 활동가 재충전, 공익활동가학교(새싹·전문가), 활동가 역량강화/교육비 지원 [시·군센터] 활동가양성교육(구리), 역량강화교육(광명·군포·성남·안성·평택), 활동가 교육비 지원(안성), 활동가 쉼지원(안성·평택) 공익활동 조사·연구(광명)

다. 도센터 전략계획 및 최근 동향

- 현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계획에는 전략목표인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3가지 추진과제와 관련된 핵심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음.
- 단체의 의제실행력 강화: 단체 성장지원(의제해결, 운영역량)
- 활동가 역량강화: 활동가 역량강화, 공익활동가학교, 활동가 재충전 지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단체와 도민 간의 협력 강화: 단체-도민 협력사업
-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정책연구, 정책공론장 운영

3) 실행과제

가. 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의 지속·확대 추진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역시 현장에 밀착한 지원은 시·군 단위에서 수행하고, 경기도는 개별 시·군 단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전반적인 여건 조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전략과제 2-2’ 관련)
-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경기도 차원의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필요

나. 지원사업의 개선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의 개선 요청은 크게 규모의 확대와 지원방식의 변화 등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음.
- 지원규모: 공익활동 현장에서는 기존의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만, 현장의 규모와 여건에 비춰볼 때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지원방식: 주로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에 기반한 지원방식의 효과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형태나 관련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 사업형태 개선: 사업의 예산(확충), 기간(다년지원), 주체(컨소시엄), 내용(사업이 아닌 운영·기반)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다양한 형태: 한국여성재단 여성운동생태계조성사업(Brave Changes)

콜라보 지원: 여성단체와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
코어 지원: 여성단체의 조직 운영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단체의 운영 안정성, 내부 역량 강화, 조직 관리, 복지 향상,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제고를 위해 지원

임팩트 조성: 여성단체의 임팩트 교육, 컨설팅, 워크숍 지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여성단체의 활동기록의 보존을 위한 교육, 아카이브 기반 지원

- 제도개선: 보조금 사업의 행정간소화, 인건비 지원(혹은 인력투입 비용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건비 사용 여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판단 가능)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그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가능한 것부터 개선작업 추진 (제도개선의 경우 ‘전략과제 3-2’와 연관)

다.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실행과제들

○ 공익활동 적정 지원예산 산출근거 연구

- 현장의 감각을 넘어 근거기반(Evidence-based) 지원예산 확충을 위해 공익활동의 변화된 현황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적정 기준선 제시

○ 1인 공익활동가 지원사업

- 특히 청년층의 경우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에 유연하게 합류하는 1인 활동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의 사업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 존재

4) 연차별 계획

가. 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1년차(2026):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 2024년 수립된 센터 전략계획과 2025년 수립된 기본계획 간 결맞춤을 위한 사업편제 조정
- 2년차(2027):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 3년차(2028):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 제3기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평가

나. 지원사업의 개선

- 1년차(2026): 지원사업 개선과제 수렴·선정
 - 토론회,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과제 선정
- 2년차(2027): 지원사업 개선과제 추진
 - 사업형태개선은 시범사업 추진, 제도개선은 ‘전략과제 3-2’ 연계
- 3년차(2028): 지원사업 개선과제 추진

4. [전략과제 1-3]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1) 취지와 방향

- 공익활동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에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시민사회 고유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지만, 공익활동 지원정책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함.
- 한편, 공익활동 자원부족 문제를 전적으로 공공재정에 기반해 해결할 수는 없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시민사회가 고유의 사회경제기반을 마련하는 자율적 노력이 필요함.
- 여기에 시민사회의 자율적 노력을 복돋우는 정책적 지원이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와 용인시는 관련 조례에 ‘비영리일자리’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제3기 기본계획을 통해 공익활동의 사회경제기반 형성을 공익활동주체와 지원주체들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단초를 마련해야 함.

2) 현황

가. 제1·2기 기본계획

- 제1기 기본계획 목표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지원’으로 ‘공익활동 사회적경제기반 형성’과 관련한 맥락을 함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이 추진됨(2021).
- 제2기 기본계획에는 ‘공익활동 사회적경제기반 형성’과 관련해 전략과제 중 하나로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이 제시됨.
 -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2023), 2025년에는 도센터 수탁법인인 (사)시민연구소 울림 주관으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함(2025).

나. 도센터 전략계획 및 최근 동향

- 현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계획에는 전략과제 중 하나로 ‘공익활동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제시함.
-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 ‘비영리일자리’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관련 조례 일부개정 작업 추진 중임.

3) 실행과제

가.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아직 활동과 지원주체 모두에게 생소한 공익활동 사회적경제기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갈 단위가 필요함.

-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에는 담당부서와 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 해당 의제에 이해관심을 지닌 공익활동 주체 참여
- 연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에 관한 학습, 사례공유, 가능한 추진과제 수렴·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활동결과를 백서로 정리하는 한시적 성격의 단위

나.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비영리일자리 활성화

-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과제 중 하나를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
- 현재 사회적으로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진행되고 있음.

=비영리일자리 정책: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서 공익활동단체들의 여건조성(예: 두루누리보험제도, 노란우산공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제도의 공익활동단체 적용), 공익활동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지역총생산기여, 고용창출, 경기조절효과 등) 인정

=청년층 사회적 일 경험 지원: 청년층의 사회적 일 경험 지원의 일환으로 경기도도 추진한 바 있는 청년층 공익활동단체 일 경험 지원사업의 안착(예: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기부·모금활성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소규모 단체 모금지원(예: 아름다운뿌리),²⁰⁾ 집중실험실 잠재후원자 발굴(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²¹⁾

=공익활동 기본소득: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에 기반해 활동가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예: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광주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역기금(Local Fund): 부산지역 기업들의 노사합의로 조성한 지역형 상생기금인 파랑저금통(부산형사회연대기금)에 공익활동지원사업 포함

=지역재단(Local Foundation): 지역주민의 기부금을 모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재단(예: 충남 천안풀뿌리희망재단, 경기 부천희망재단)²²⁾

=지역자산화(Local Commons):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방식(예: 터무니있는집 ‘커먼즈 금융지원’)²³⁾

- 특히 조례에 명시돼 있는 ‘비영리일자리 활성화’는 시범 사업의 우선순위로 고려. 2025년 추진된 관련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추진방안들이 제안된 바 있음
- 비영리일자리 기반조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비영리일자리 통합지원 강화: △비영리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 지역 기반 비영리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비영리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군 단위 비영

20) 아름다운뿌리 홈페이지(<https://beautifulroot.or.kr/34>).

21)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pa.kr>).

22) 천안풀뿌리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hopefund.or.kr>); 부천희망재단 홈페이지(<https://www.hopefoundation.or.kr>).

23) 터무니있는집 홈페이지(<https://themuni.co.kr>).

리일자리 모델 확산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다.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실행과제들

- 고향기부제 활용: 고향기부제로 조성된 기금은 공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 여론조성을 통해 공익활동 지원에 할애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② 기부금의 사용목적 관련 조항)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4) 연차별 계획

가.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1년차(2026):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학습)
- 2년차(2027):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과제설정)
- 3년차(2028):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백서발간)

나.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 3년차(2028):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제4기 기본계획의 과제 지속여부, 추진방식 판단

5. [전략과제 2-1] 민·관, 관·관, 민·민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

1) 취지와 방향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발전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는 특정 부서나 기관을 넘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전 사회적인 공동의 과제라 할 수 있음.
- 또한 기본계획은 사업계획과 달리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규정하는 종합 계획이지만, 그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편중된 역할로 정책 효과적 추진에 한계를 나타냄.
- 향후 민·관의 다양한 영역과 주체를 아우르는 협력에 기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2) 현황

가. 제1기 기본계획

- ‘민·관, 관·관, 민·민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 제1기 기본계획에는 4가지 전략 중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가 포함돼 있음.
 - 아울러 주요과제로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공익생태계조성 정책토론장’, ‘파트너십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제시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들이 실행됨.
 - [도센터] 유관기관 단체 네트워크, 민관합동 정책토론회(2020~2022), 공익활동가 한마당(2021)
 - [시·군센터] 의제별·권역별 네트워크 구축(군포·평택), 민·관정책토론회, 공익활동 FAIR, 공익활동 네트워킹 데이(군포), NPO연찬회(안성), 공익활동가대회(평택)

나. 제2기 기본계획

- ‘민·관, 관·관, 민·민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한 제2기 기본계획의 3가지 목표 중 하나로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설정, 8대 전략 중 하나로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함.
 -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시민참여영역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연계 사업 추진
- 아울러 또 다른 전략으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를 설정하고, 전략과제로 ‘시민사회영역 전담부서 기능 강화’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들이 실행됨.
 - [도센터] 공익활동가대회, 유관기관·단체 협력,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공익활동 페스타(2024

~2025)

- [시·군센터] 네트워크 간담회, 중간지원조직·지역단체 협력(광명), 공익활동네트워크(군포), 공익활동가대회, 시민활동지원조직 협력기반 구축,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익활동 공유회(평택), 네트워크 회의(안성)

다. 도센터 전략계획 및 최근 동향

- 현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계획에는 두 가지 전략과제와 이에 따른 핵심사업을 제시함.
 - 공동의 목적에 기반한 공동사업 개발과 추진: 영역 간 협력사업(중간지원조직·기관·시민사회), 도정협력사업(주민참여예산), 단체-기업 협력, 활동가 네트워크
 - 국제협력기반 조성: 국제협력사업
- 최근 도센터를 중심으로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국제협력사업(요코하마 시민협동추진센터), 세계시민대회(2025 공익활동 페스타), 청년 활동가 간담회/네트워크 캠프 등 다양한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 한편, 현행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7)에는 추진과제 ‘2. 민관협치 네트워크 강화’의 세부과제로 ‘2-2. 도-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4. 참여를 통한 아젠다 조성’의 세부과제로 ‘4-2. 분야별 공익활동 육성과 활동촉진’이 포함돼 정책 간 상호연계가 필요함(경기도 소통협치관 2024).

3) 실행과제

가. 관·관협력: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담당부서는 소통협치관실 도민협력팀(주무관 3인)이지만 경기도 조직도 업무분장상 유관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유관부서와 업무

공동체지원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자치행정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장애인 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관리

기후환경정책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 등

복지정책과: 국 소관 법인 및 민간단체 행정처분총괄, 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

여성정책과: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자치행정과: 민간단체지원관련업무

아동돌봄과: 아동분야 사회복지법인 업무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의 관점에서 원활한 유관업무 관·관협력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소통협치관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유관부서 팀장·주무관, 산하기관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로 구성된 정례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공유, 부서·기관 간 사업계획 공유, 협력방안 논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5) 중 부처 간 협의구조 관련 조항 제9조(시민사회위원회) (생략)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나. 민·관협력: 민·관·정 간담회, (가)경기공익거버넌스

- 경기도 민관협치 기본계획(2024-2027)은 ‘도-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민·관 간 담회 개최를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간담회의 목적이 주로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협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물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정책에 협력할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중요함.
 - 이를 위해 정례적으로 협치위원, 경기도 시민사회 대표, 담당부서(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도의회 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공동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 개최
- (가)경기공익거버넌스 추진
 -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기복지거버넌스와 여성 분야의 경기여성거버넌스 사례를 참조해 (가)경기공익거버넌스 추진 필요
 - 앞서 언급한 관계부서 협의체(관·관협력)과 민·관·정 간담회(민·관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가)경기공익거버넌스 추진 가능

다. 민·민협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공익활동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 등 기존에 추진해 온 민·민협력 지원사업은 확대하는 가운데,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시작된 기업과 시민사회 간 협력 확대
- 기업-시민사회 간 협력 및 이를 촉진하는 신규 지원사업 개발·추진
 - 최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기준인 ESG에 있어 환경(E)과 거버넌스(G)는 활성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논의와 실천이 미흡한 ‘사회’(S) 영역에 전략적 접근 필요

유관 분야의 협력사업 사례

=SK행복나눔재단: 기업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크 지원사업 ‘세상파일 라운드테이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양한 시민사회-기업 간 협력사례와 관련 이슈를 소개하는 ‘어떤CSR’

=비더체인지얼라이언스: 빅이슈코리아와 라이프 스타일 기업 아더엘, 킵고잉이 상호협력을 통해 증가한 기업의 수익 중 일부를 기부하는 순환적인 협력 모델 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와 시민사회 공익활동 주체들의 만남을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접점마련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다.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실행과제들

○ 담당부서 기능강화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의 관·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담당부서의 기능강화 필요. 이는 제2기 기본계획의 전략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음.
- 우선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업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업무에 관·관협력, 민·관협력, 민·민협력(기업-시민사회)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가)공익활동지원팀 신설 고려
- 담당부서 기능강화에 관한 사안은 ‘전략과제 3-2’의 제도개선 과제와 연계 추진 고려

○ 민·민협력 일환으로 민·학협력 지원

- 관내 대학·연구소와 시민사회 간 협력(공동연구, 학과 및 교육과정 개설)
- 부족한 시민사회·공익활동 관련 연구주체 양성과 교류 지원을 통한 연구 생태계 조성
- 경기연구원에 시민사회·공익활동 관련 주제 전담 부서나 연구직 신설

4) 연차별 계획

가. 관·관협력: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1년차(2026):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준비
- 2년차(2027): 관계부서 협의체 운영
- 3년차(2028): 관계부서 협의체 운영

나. 민·관협력: 민·관·정 간담회

- 1년차(2026): 민·관·정 간담회 추진 준비
- 2년차(2027): 민·관·정 간담회 운영, (가)공익활동거버넌스 구축
- 3년차(2028): 민·관·정 간담회 운영, (가)공익활동거버넌스 구축

다. 민·민협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1년차(2026):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개발
- 2년차(2027):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운영
- 3년차(2028):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운영

6. [전략과제 2-2]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1) 취지와 방향

- 경기도 시민사회는 광역 차원의 의제를 다루는 영역도 존재하지만, 그 토대는 31개 시·군 지역 시민사회로 구성됨.
- 담당부서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만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시·군별 주체들의 역할이 필요함.
- 31개 시·군이 지역 시민사회 현장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이들을 북돋우고 광역적 의제를 다루는 역할분담에 기반해 협력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도-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은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넘어 시민사회 정책의 위상 제고와 공익활동의 지역적 저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

2) 현황

가. 제1·2기 기본계획

-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와 관련해 제1기 기본계획은 주요과제에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와 ‘지역순회 간담회’가 포함됨.
 -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도센터에 의한 시·군 공익활동 촉진장려 사업(2022년에는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시·군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및 지역순회 간담회(2020~2021),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사업(2022)이 추진됨.
 - 아울러 구리·군포(2021), 성남·안성·평택(2022)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됨.
- 제2기 기본계획에는 전략과제로 ‘경기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가 설정됨.
 -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도-시·군 센터 간 워크숍, 네트워크 회의, 협력사업 등이 추진됨.
 - 아울러 광명(2023), 안양(2025)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됨.

나. 도센터 전략계획 및 최근 동향

- 현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계획에는 9번째 전략과제로 ‘시·군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설정함.
 - 구체적으로는 31개 시·군 네트워크와 센터-지역시민사회 연결을 그 내용으로 제시하고, 주요 사업으로 시·군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도센터는 2025년 동부·서부권역별 ‘공익단체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 현재 14개 시·군에 포괄적인 공익활동 지원조례가 제정된 상태이고, 최근 김포, 고양, 시흥 등 추

가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한편, 현행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7)에는 추진과제 ‘2. 민관협치 네트워크 강화’의 세부과제로 ‘2-1. 도·시·군 민관협치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간 상호 연계가 필요함(경기도 소통협치관 2024).

3) 실행과제

가.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

- 가장 긴요한 과제는 31개 시·군별로 조직과 영역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경기도와 소통하는 ‘협력주체’가 필수적임.
 - 현재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외 지역이 경우 협력주체를 발굴하고, 도·시·군 간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협력주체들은 해당 시·군 지역 시민사회의 한 단체일수도, 네트워크 형태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협력주체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임.
- 31개 시·군에 센터가 설치된 자원봉사 영역과 아직 소수 지역에 센터가 설치된 시민사회·공익활동 영역 사이의 발전단계에 있는 마을공동체 영역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마을공동체 영역은 현재 31개 시·군 중 19곳에 센터가 설치돼 있음.²⁴⁾ 센터와 함께 지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로 마을공동체네트워크(마을넷)이 운영되고 있음.
 -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마을넷이 역할을 수행하고 센터가 설치된 곳도 중간지원조직인 센터와 민간협의체인 마을넷의 협력이 이뤄짐.
- 경기도는 시·군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주체를 발굴하고 역량강화와 교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도센터는 제1기 기본계획 시기 시·군센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순회간담회와 시설비 지원 등이 이뤄졌다면, 3기에는 협력주체 발굴로부터 시작해 네트워크에서 센터 설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나.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주체 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 경기 지역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시·군 마을넷의 네트워크인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사례를 참조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나 협력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지리적·사회적으로 인접한 시·군 간 권역별 네트워크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4)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520>)

○ 도·시·군 간 정례적인 협의구조 마련

- 현행 도·시·군 간 협의구조의 확대·개선
- 공익활동 민·관연석회의: 도·시·군의 담당부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도·시·군센터, 시·군 협력주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네트워크로 정례화 추진
- 지원주체협의회: 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주체 공동의 공동사업 협의 및 공동 학습 워크숍 등
- 각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도·시·군 간 협의행사를 3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방안 고려

다.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실행과제들

○ 시민사회·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인력 파견

- 경기도가 원하는 시·군과 협력해 해당 시·군 협력주체들을 지원하는 지원인력 파견 방안 모색
- 사례: 마을공동체 영역의 ‘공동체지원활동가’, 주민자치회 영역의 ‘동자치지원관’, 민관협치 영역의 ‘협치조정관·지원관’

○ 권역별 공익활동센터 설치 가능성 타진

- 서울시의 경우 민선7기 기초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NPO센터 운영 사례(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3개 센터)

4) 연차별 계획

가.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

- 1년차(2026): 협력주체 발굴·지원을 위한 조사와 협의
- 2년차(2027):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사업
- 3년차(2028):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사업
- 제3기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사업 평가

나.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1년차(2026):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현행 사업 확대·개선)
- 2년차(2027):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3년차(2028):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7. [전략과제 3-1]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1) 취지와 방향

- 그간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고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아직 많은 도민들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음.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함께 관련 정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홍보사업을 좀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간 홍보사업은 가장 활성화된 사업영역 중 하나임.
-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기본적인 홍보사업은 지속 추진하더라도(‘전략과제 1-1’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함.

2) 현황

가. 제1·2기 기본계획

-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와 관련해 제1기 기본계획에는 주요과제 중 하나로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을 설정함.
- 제2기 기본계획 전략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방안 마련’이 설정되고, 주요과제로 ‘경기도민 공익활동 통합 교육체계 구축’,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연계 사업 추진’이 제시됨.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시민교육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3~2024년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연구·조사와 토론회 등을 추진함.

나. 도센터 전략계획 및 최근 동향

- 도센터 전략계획에는 4가지 전략목표 중 하나로 ‘도민의 참여와 지지 확장’을 설정함.
-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광명과 평택은 관련 조례에 사회적 인정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 5주년을 맞아 SNS 연중 캠페인 "경기라서 가능해, 함께라서 의미 있어" 추진함.
 -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5년 공익활동 인증제 (가)‘안양공풀’ 시범사업 추진 중임.

(가)‘안양공풀’ 주요 사업내용

1. 인정 공익활동의 기준 마련: 공익활동의 개념과 인증하는 활동내용 구체화

2. 온라인 플랫폼(안양공플) 구축(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연동)
3.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시범 사업 실시
4. 안양지역 내 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과의 공익활동 경력인정에 대한 협약 체결
5. 경력인정 실제 사례 발굴

3) 실행과제

가.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그간 이뤄진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경기도 내·외의 논의와 실천현황을 수렴하고, 이후 경기도에서 추진할 사회적 인정 관련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단위 필요
 -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에는 담당부서와 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 해당 의제에 이해관심을 지닌 공익활동 주체 참여
- 연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에 관한 학습, 사례공유, 가능한 추진과제 수렴·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활동결과를 백서로 정리하는 한시적 성격의 단위
 - 제3기 기본계획 3년차에는 도출과제 중 하나를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제도·지원사업 예시
 - 공익활동 시민교육: 현행 중·장년 교육(도센터), 찾아가는 학교교육(평택) 외에도 청소년 진로교육(예: 서울공익활동지원센터 ‘아하~ 공익활동’), 관내 대학 교양과목 등
 - 공익활동 공직자교육: 도·시·군 유관부서·업무 공무원, 의회 의원 교육
 - 공익활동가 직업적 인정: 직업군 등재, 활동경력 인정 등
 - 공익활동 주체들을 위한 인정과 예우(예: 자원봉사 영역의 자원봉사자 인정과 예우)

<표 V-1> 자원봉사 영역의 자원봉사자 인정과 예우

인정의 유형	요소	인정제도와 사업	
정서적 인정	정서	감사표현	△감사편지 △연하장 △공개발언(기관장 인사말 등)
		유대감	△식사초대 △친목모임 △생일축하 △근조기·상조물품 지원
		행사	△모임(자원봉사자의 밤, 체육대회) △여행(문화탐방·힐링) △문화(단체관람) △행사(공공행사 초청)
사회적 인정	성과	의미부여	△원로봉사자 자서전·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도움수요자 감사인사 전달
		공유·홍보	△활동공유회(세바시) △활동사진 공모전 △언론홍보
상징적 인정	명예	포상	△봉사자·단체 포상 및 추천 △봉사왕 자체투표
		인증품	△패치·조끼·기념품 △자원봉사자증(카드) △인증패·문패(우수봉사자, 자원봉사자의 집 등)
		기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명예의 전당 △봉사시간 환산금 봉사자 명의 기부
기회의 인정	성장	학습	△전문·특별교육 △국내외 연수·시찰
		의례	△자원봉사자 서약 △리더·임원 임명
		경력	△자원봉사 경력인증 △추천서

간접적·경제적 인정	유익	공공서비스	△예방접종 △주차할인 △공공시설·서비스(장례시설, 민원서류 등) 이용료 감면
		협찬서비스	△마일리지·가맹점 할인 △건강검진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후원품 연계
		현물	△교통카드 △상품권(기프트콘) △종량제봉투 △간병비·병원동행 서비스 △문화활동비 △장학금(청소년)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4.

나.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 사회문제 해결 공동실천 캠페인: 활성화된 공익활동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범도민 캠페인
 - 누구나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예: 오늘의행동 ‘행동구독’, 아름다운재단 ‘공익활동에 나도 한발짝’)
 - 모두의 문제를 모두의 공익활동으로 해결한다(예: 2026년 세계자원봉사의 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류의 실천’, 외로움 문제 해결을 사회적 처방으로써 공익활동)
- 공익활동 인식제고 공동 캠페인
 -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확산: 공익활동이 경기도 지역사회 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홍보(예: 서울시NPO지원센터 ‘퍼스트 펭귄 캠페인’)
 - 1시민 1단체 후원 캠페인: 경기도 내 다양한 공익활동단체 활동 릴레이 소개 및 후원 연계

다.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실행과제들

-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시범사업의 정책실험 연결
 -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가)안양공플’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협력해 정책실험(PolicyLab) 개념을 적용해 가능성 타진과 보급형 사업 개발
 - 이후 다른 시·군 및 경기도 차원으로 사업 확산 모색
- 공익활동 이해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평가, 공익활동의 경제적 가치 측정(‘전략과제 1-3’ 관련),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표준적 개념설명 등
- 공직자 공익활동 경력 인정제 도입
 -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의원) 채용·선출 기준에 일정 정도 이상의 공익활동 경력 의무화 및 경력에 따른 가산점 등

4) 연차별 계획

가.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1년차(2026):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
- 2년차(2027):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

○ 3년차(2028):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제4기 기본계획의 과제 지속여부, 추진방식 판단

나.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 1년차(2026): 공동캠페인 기획('전략과제 2-2' 도-시·군 협의구조에서 논의)

○ 2년차(2027): 공동캠페인 추진

○ 3년차(2028): 공동캠페인 추진

-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제4기 기본계획의 과제 지속여부, 추진방식 판단

8. [전략과제 3-2]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1) 취지와 방향

- 모든 정책의 기본적 구조 중 하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인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반영 구조가 미비함.
- 많은 공익활동 주체들이 자신이 다루는 의제(예를 들어 환경운동의 경우 환경의제)에 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권익주창(advocacy)은 미흡한 상황임.
- 공익활동 주체들이 영역과 조직을 넘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동의 의제에 관해 논의하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2) 현황

가. 제1·2기 기본계획

-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와 관련해 제1기 기본계획에는 주요과제 중 하나로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구성’ 설정하고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함.
 -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도센터가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군에서도 시민사회 공론장(성남·안성)이 개최됨.
- 제2기 기본계획에서는 전략목표 중 하나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주요과제로 ‘사회문제해결형 경기도민 공론장 활성화’와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역할 강화’를 제시함.
 -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도센터가 경기공익활동포럼과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시·군에서는 시민공론장(안성), 의제의 시간(광명),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안양)를 추진함.

나. 도센터 전략계획 및 최근 동향

- 도센터 전략계획에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정책공론장 운영’을 포함함.
- 최근 현장에서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과 공익활동 정책과정에 현장의 목소리 반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3) 실행과제

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초창기부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력있는 운영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 다양한 공론장과의 연계운영 등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최근 경기도의회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경제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아울러 현장에서부터 제기되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본계획 등 과제에도 반영됐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음.
 - 그 원인 중 하나는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다루는 단위의 부재임.
- 현행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산하에 제도·규제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공익활동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분과위원회는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담당부서와 도센터 관계자, 외부 전문가, 공익활동 주체 등으로 구성함(사례: 민선8기 서울시 서울협치협의회 산하 ‘진단과권고위원회’).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설정하고 경기도·의회에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개선과제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조례: 공익활동 조례의 기본조례로 성격 전환, 제3기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된 사항 일부개정
 - 추진체계: 담당부서 기능강화(‘전략과제 2-1’ 관련), 도·시·군 협의구조, 공익활동 지원인력(‘전략과제 2-2’ 관련) 등
 - 지침: 보조금 사업 지침(‘전략과제 1-2’ 관련), 민간위탁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등

나.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공익활동 주체들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활동 정책에 관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공동제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공익활동 주체들의 공론장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정례화
 - 현재 전국적 연례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가 주간’과 도센터의 ‘공익활동가대회’가 별도로 진행 중
 - 공익활동 주체들의 행사를 결합해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행사 성격을 넘어 경기도 시민사회의 현황 진단과 미래 전망, 그리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전략을 세우는 장으로서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정례화

서울 은평구 시민사회의 ‘은평상상컨퍼런스’ 사례²⁵⁾

은평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이 매년 1주일간 모여서 공익활동의 정책과 실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주최하는 공론장

다.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실행과제들

- 경기도지사와 경기 시민사회 제 부문 대화
 - 민관협치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점차 사회적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과 경기도지사 간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민관협력 방안 등에 관한 정책의 큰 방향 모색
- 경기도 시민사회·공익활동 사회적 협약
 - 경기도 협치정책과 공익활동 정책을 접목해 경기도와 경기 지역 시민사회 간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회적 대화 진행
 -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로 경기도와 경기 지역 시민사회 간 협력과 지원을 위한 상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약속을 담은 문서인 협약 합의

4) 연차별 계획

가.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 설치

- 1년차(2026):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강화 방안 마련
- 2년차(2027): 역할강화 추진 및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 운영
- 3년차(2028): 역할강화 추진 및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 운영
 - 역할강화 및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 활동백서 작성 및 활동 평가

나.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1년차(2026):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 2년차(2027):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 3년차(2028):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25) (사)은평상상 홈페이지(<https://epsangsang.net/115>).

<표 V-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차별 계획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1년차(2026)	2년차(2027)	3년차(2028)
1 지속가능한 지원	1-1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1-2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 조성	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지원사업의 개선	지원사업 개선과제 수렴·선정	지원사업 개선과제 추진	지원사업 개선과제 추진
	1-3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 TF(학습)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 TF(과제설정)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 TF(백서발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2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2-1 민·관, 관·관, 민·민협력 기반 추진체계 구축	관·관협력: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준비	관계부서 협의체 운영	관계부서 협의체 운영
		민·관협력: 민·관·정 간담회, (가)공익활동거버넌스	민·관·정 간담회 추진 준비	민·관·정 간담회 운영, (가)공익활동거버넌스 구축	민·관·정 간담회 운영, (가)공익활동거버넌스 구축
		민·민협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개발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운영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운영
	2-2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	협력주체 발굴·지원을 위한 조사와 협의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사업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사업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3-1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시범사업 추진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공동캠페인 기획	공동캠페인 추진	공동캠페인 추진
	3-2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강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강화 방안 마련	역할강화 추진 및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 운영	역할강화 추진 및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 운영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참고문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 경기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 2019.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지원방안 연구.
- 경기도 소통협치관. 2024. 2024-2027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 국정기획위원회. 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김혜원·박찬임·황덕순·김영용·박종현·전승훈. 2009.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 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리프킨, 제러미. 안진환 역. 2012.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 박영선·김성진·신희진. 2022. 코로나 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박영선·김유리. 2023. (사)시민 10년 활동 진단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시민.
-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사회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정치·인권 및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 이광희 외. 2022.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이환성 외. 202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경훈·김종수·장원웅·최유진·이수정·홍상우·장현경.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철민. 2015.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 NGO연구 10(2). pp. 1-34.
- 조철민·강세진·신권화정·김승순. 2021.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철민·정란아·박운정·권지현·김유리·김승순. 2024.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4. 자원봉사 인정 실용 가이드: 환대로 시작하는 자원봉사문화.
- Pestoff, V. 1992. Third sector and co-operative services: An alternative to privatiza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15(0). 21-45.
- WMD. 2012. Defending Civil Society Report(<https://movedemocracy.org/wp-content/uploads/2017/09/English-Defending-Civil-Society-Report-2nd-Edition.pdf>).